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 방재저널

— 2026

1



권두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특 집

대설·한파

오피니언

'공정한 대우'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한국방재협회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 겨울철

#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2025. 12. 1.~2026. 2. 28.

※ 대설, 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6.3.15.까지) 운영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외국인 포함)
-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www.safetyreport.go.kr](http://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 한국방재협회 QR코드 소개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  
교육, 재난안전신기술, 협회 소식 등 안내

### 협회 주요업무

#### 교육

교육과정, 일정, 수강신청,  
교육게시판 안내



#### 회원광장

자격&가입안내, 회원현황,  
회원관리규정

#### 신기술

제도소개, 신청·평가 안내,  
지정현황 제공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소개, 민원업무안내,  
등록현황 제공

### 카톡채널 & 커뮤니티

카카오톡 채널  
협회 소식 안내



#### 방재안전직 커뮤니티

방재소식, 정책제안,  
자료실 등 정보제공

# CONTENTS

2026.01 | Vol. 28 / No.1

제 125호



**발행인** 방기성  
**발행처** 한국방재협회  
 우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성내동 447-9)  
**담당자** 김진호 팀장  
**T E L** 02. 3472. 8062~3  
**F A X** 02. 3472. 8064  
**발행일** 2026년 01월 25일  
**인쇄처** (주)가나씨앤피 02. 2272. 1143

### 편집위원회

**위원장** :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 임재열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차상화 행정안전부 과장  
 최병진 (주)이산 부사장  
**간사** : 안재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위원** : 김종호 울산대학교 교수  
 나우영 동아대학교 교수  
 박승주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유현 (주)유신 부장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  
 송주일 (주)부린 연구소장  
 송창근 인천대학교 교수  
 신주영 국민대학교 교수  
 이재근 극동엔지니어링 이사  
 임경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전창현 고려대학교 교수  
**고문** : 임수근 前YTN 부국장



## 04 권두언

기후 재난의 뉴노멀, 과학과 연대로 답하다 | 신정훈

## 07 특집대담

“안전, 국가적 과제…방재 전담·전문화 조직 필요”  
| 신정훈

## 12 특집

### <대설·한파>

- 01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 02 한파쉼터부터 고속도로 제설까지, 한파·대설 선제적 대비
- 03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 04 부산시, 한파 대비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
- 05 부산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월동대책 시행
- 06 서울시, '보온강화+시민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이중 예방
- 07 충청북도, 한파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36 브리핑 & 뉴스

### <정책>

- 01 행안부,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 02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 03 잦은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
- 04 새해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05 사회재난 대비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 06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25 한국행정혁신대상' 대상
  - 07 환경부,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 구조적 개편
  - 08 빗물받이 정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능력 강화
- 62 <지자체>
- 01 경상남도, 호우피해 복구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 02 부산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
  - 03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04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 민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 강화
  - 05 대전시, 위기관리 매뉴얼 전국 모범사례 됐다
- 80 <회원사>
- 01 LH,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도입
  - 02 “시 기반 미래형 수도 기술을 한눈에” 한국수자원공사, ‘waterAX’ 개시
  - 03 한국수자원공사, 향후 10년 물의 미래를 밝힐 ‘미래 물 기술 20선’ 공개

- 89 오피니언 \_\_\_\_\_
  - 01 ‘공정한 대우’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김진호
- 92 회원광장 \_\_\_\_\_
  - 01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소개 | 전계원
- 95 스토리 \_\_\_\_\_
  - 하모니카 배우기 | 윤순섭
- 101 기술 \_\_\_\_\_
  -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깎기부 패널식 옹벽

“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제1 가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정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빈틈없이 협력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 기후 재난의 뉴노멀, 과학과 연대로 답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방재인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신 국민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입니다.

새해를 여는 이 뜻깊은 시점에 「방재저널」 제12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설립 이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국방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5년은 기후 재난의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영남 지방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은 축구장 7만 개에 달하는 10만 4,000ha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경기 광명에서는 40.2℃라는 극한 폭염이 기록되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진 국지성 호우는 재난이 더 이상 과거의 통계 안에 머물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는 방재 정책이 사후 복구를 넘어 과학적 예측과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안전 관리 체계'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6.6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재난 안전 예산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방재 하기 전 영역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 체계는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24시간 빈틈없는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위성과 드론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은 수치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3차원 입체 공간에서 홍수 상황을 시각화합니다. 지휘관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I 홍수 예보 시스템은 국지성 호우의 경로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예측하여 하천 범람과 지하 공간 침수에 대비할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줍니다.

“방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첨단 방재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론 재난 대응 플랫폼은 산불이나 고층 빌딩 화재처럼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하여 현장 대응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진 대비 내진 보강, 산사태 위험지구 추가  
지정,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각종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  
했습니다. 방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첨단 방재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재난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과 이·통장님들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약자와 1:1로 매칭되어 대피를 돕는 현장 중심의  
연대는 그 어떤 첨단 기기보다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 지역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곳에서  
는 이웃 간 경계와 신속한 현장 판단이 재난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마을에서  
주민 자체 경계 활동과 비상연락망 구축 덕분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력은 재난 발생 시 공공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고, 참사 이후 유가  
족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사회  
적 회복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동체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재난 구조·구급 인력  
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국가재난통신망 안정성  
확보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제1 가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정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빈틈없이 협력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방재저널」이 앞으로도 최신 방재 정보의 허브로서 대한  
민국 안전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방재인  
여러분의 전문 지식과 시민들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며, 안전은 나누는 희망찬 2026년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전, 국가적 과제… 방재 전담·전문화 조직 필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담 김진호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 글쓴이 박소윤 미디어펜 기자 | 사진 김상문 미디어펜 사진부장

“ 국회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협업 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행안위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재난은 언제 우리의 일상을 덮칠지 모르는 ‘상시적 불청객’이 됐다. 초대형 산불과 기록적 폭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며 재난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이 진화하는 속도만큼, 국가의 대응 역량도 그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 안전을 입법으로 시스템화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다. 재난·안전은 물론 지방자치와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중책을 맡은 그는, 제도의 ‘자동성’을 먼저 묻는다. 책상 위의 설계가 아닌 위기의 순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신 위원장의 시선이 늘 안전지대의 바깥, 재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이유다.

”

### 재난 대응, 국민 삶 변화 시키는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 안전을 넘어 지방자치와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역임해 ‘풀뿌리 정치인’으로 불리는 신정훈 위원장은 22대 국회 출범 후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출돼 1년 6개월 가까이 행안위를 이끌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후 회복탄력성까지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정치의 생활화를 실천 중이다.

그는 위원장으로서의 지난 시간을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돌아본다.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제도가 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재난 안전 자치·행정 전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재난 안전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고 회고했다.

그가 거듭 강조하는 키워드는 ‘체감’이다. 정책의 성과가 보고서나 수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느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위원장은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 △재정분권을 넘어선 실질적 자치분권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일을 행안위의 분명한 과제로 제시한다. 목표는 단 하나,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국민적 우려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방재 '전담' 조직 출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엔 김상문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방재 역량 제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안전은 '국가적 과제'... 국민안전처 부활 찬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동시에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안위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안전 어떤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재난 유형별로 주무 부처가 나뉘어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재난은 갈수록 복합·대형화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처간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조직 개편 논쟁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가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다. 신 위원장은 "재난 대응 환경이 복잡해지고 위험 요인이 다양해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역할 배치는 지속적으로 점검돼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처방보다는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전은 국가 운영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위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안전이 언제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 신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 출범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난·안전 기능을 한 축으로 모아 전문성을 강화했던 과거 국민안전처 사례처럼, 전담·전문화 조직의 필요성 역시 배제하지 말고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원장으로서는 각오도 단호하다. 그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쳐도 행정과 안전 조직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강화해 국민께서 '정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안전 행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 제도와 사람, 두 축이 맞물릴 때 ‘시스템’이 된다

방재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신정훈 위원장이 내린 답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난의 양상이 고도화될수록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구조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방재 전문 인력의 부족과 직무 불균형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과제다. 신 위원장은 이 지점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가 아닌 ‘정비’로 규정한다. 새로운 사업만 무작정 늘리거나 제도를 덧붙이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 인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서 법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의 시선은 인력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부처간 역할 조정, 교육 체계의 현실화, 인력 배치 기준의 합리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병목을 하나씩 해소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는 인식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전문 인력이 양성부터 활용까지 균형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의 발언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녹아 있다.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은 선상에 있다. 그는 “취약계층은 평소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겨울철에는 주거·난방·의료·돌봄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복지·보건·안전 정책이 각기 흩어져 작용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제도를 통해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으로 생기는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어느 계층도 계절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농민운동가와 나주시장, 국회를 두루 경험한 정치인이다. 그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만큼 실질적인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다. 지방 다중 과제를 해결하고 변화의 동력을 찾겠다는 각오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지방자치 30년, '명목'에서 '실질'로 넘어갈 시간

농민운동에서 출발해 나주시장, 그리고 국회까지. 신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정치를 두루 경험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뛰어난 그에게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소회를 묻자 '성과보다 전환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확장해 온 제도적 토대였지만, 중앙집권적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역 간 격차와 인구소멸 문제는 현 체계만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이유다.

신 위원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은 지방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명목상의 분권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월말 현재 전남지사직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그는 지역의 미래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환과 인구감소라는 전남의 과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에너지·AI·데이터 산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신 위원장은 "농민운동과 지방정부, 국회를 거치며 지역은 스스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에너지·AI·데이터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실제 행정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DPA**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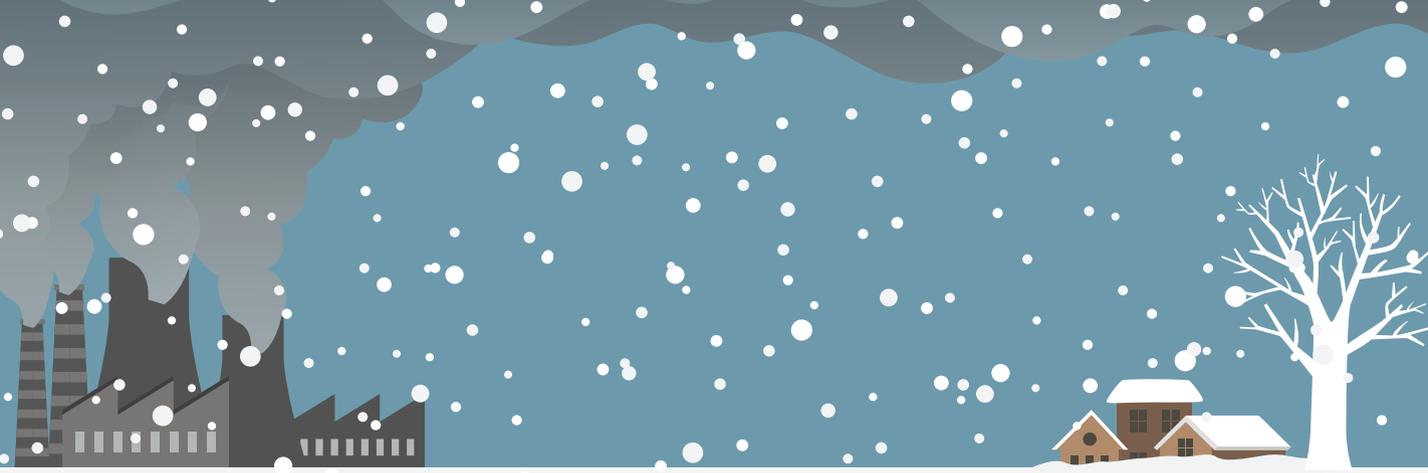
##### <학 력>

영산포중학교 졸업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주요경력>

제19·21·22대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 6.~)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2024. 8.~ 202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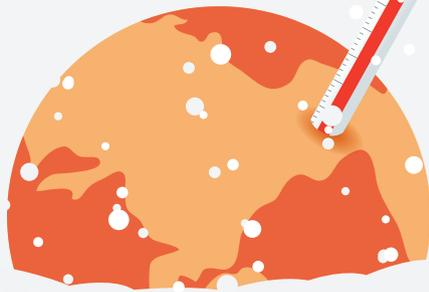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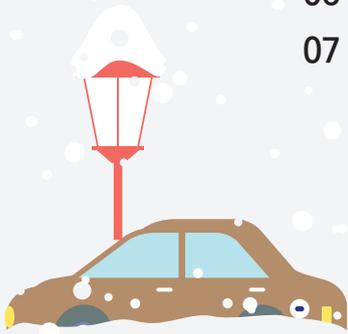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2022. 8.~ 2024. 6.)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2017. 6.~ 2018. 3.)  
민선 3·4대 나주시장 (2002~2010)



[ 특집 ]

## 대설·한파

- 01 |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 02 | 한파쉼터부터 고속도로 제설까지, 한파·대설 선제적 대비
- 03 |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 04 | 부산시, 한파 대비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
- 05 | 부산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월동대책 시행
- 06 | 서울시,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 07 | 충청북도, 한파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 돌입

정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발표  
인명피해·국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

“정부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고려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다. 지방정부와 함께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정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2025년 11월 15일(토)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고, 강수량은 대체로 적겠으나,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서양-인도양의 고수온(기온 상승요인)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감소(기온 하강요인) 정도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고,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설 주요 대책〉

### 1. 촘촘한 사전대비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대비를 더욱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제설장비 구매 등을 위한 대설 재난 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제설제 총 116만 톤을 우선 확보했으며,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사용량 대비 116% 수준까지 비축량을 확대한다.

중앙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10.27.~31.)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회의(11.10.)를 개최해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합동 점검과 점검회의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최대한 신속히 보완을 추진한다.

아울러, 폭설·결빙 대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국토부·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을 비롯해 기관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국토부 지방청 등이 9회, 고속도로 관련 도로공사 1회, 민자 23회, 광역과 기초 지자체 총 108회 등이다.

### 2.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난 겨울 피해가 컸던 적설취약구조물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시설을 중점 관리한다.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 지역을 전년 대비 686개소 증가한 8,761개소를 지정·사전점검 했으며, 위험기상 시 예찰·점검 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위험기상 시 우선 통제 및 주민대피를 실시한다. 결빙취약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적설로 인한 붕괴에 취약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원예·특작시설은 30년간 기상을 고려해서 적설심을 상향했으며, 가금류 축사는 지역별 설하중 기준을 세분화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부속시설 등 내설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가설건축물·부속시설 구조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3. 강화된 상황관리

무거운 눈(습설), 폭설 등 이상기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보, 재난알림 등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습설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세밀한 기상실황 모니터링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 상 적설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예상강수량, 수상당량비 등을 고려한 3단계(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강설정보를 제공한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을 기반으로 한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부단체장 등)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재난문자는 강설강도·적설 등 실황을 고려해서 시·군·구 단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수도권·충남·전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상실황, 제설현황 등 현장·재난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4.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제설 미흡으로 인한 정체·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대응을 강화하고, 고립상황에 대비한다. 11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후 기상·도로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폭설로 교통정체,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 교통통제하고, 제설작업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 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체계와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 물품 등을 전진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 대비 특수 대형구난차 협력망(176개 업체)을 구축했으며, 특보 시에는 대형구난차를 현장에 사전 배치한다. 대설주의보 시에는 취약구간에 대형구난차 1대를 배치하고, 대설경보 시에는 대형구난차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 〈한파 주요 대책〉

#### 1. 한파 대응체계 정비

정부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한파센터를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책비(재난특고세) 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10.29)했다. 사전점검에서는 한파센터 위치 정확성, 안내판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대책기간 돌입 전에 한파센터 위치 등 정확성을 높이고, 온열의자와 같은 저감시설을 정비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대책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 기상정보 및 피해상황 등을 소통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대피소 안내와 응급조치 등 경찰·소방·지방정부 간 비상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노인, 쪽방주민, 노숙인 등에서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경제적(수급자 등, 주거취약, 노숙인), △사회적(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야외 활동자) 등으로 세분화했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특보 시 생활지원사 등이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

당에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가스·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난방시설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별도 쉼터도 운영한다.

### 3. 인프라 구축·운영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해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 한파쉼터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파 특보시에는 야간 및 주말에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또한, 온열의자 및 바람막이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시 조기출하 등을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보온 대책 등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 〈대설·한파 홍보 추진방향〉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야외활동자 등 대상 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TV 프로그램,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12~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 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지시한 “재난·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교부세 대폭 지원과 같은 포상 방안을 강구할 것”에 따라 올여름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기간 이후 겨울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에도 같은 기초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고려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겠다”라고 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관리과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철도안전정책과, 공항운영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수도기획과, 기후적응과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원예경영과, 축산정책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기상청 예보정책과



## [대설] '25~'26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구분	'24~'25년	'25~'26년
적설자료 제공 주기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지점별 1시간 단위 제공	지점별 10분 단위 적설정보 추가 제공 (1시간 단위 적설정보 지속 제공)
대설 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	대설 안전안내문자 시범운영* (강설강도와 누적적설량 고려) * 수도권 충남 전북
대설 재난위험 알림 서비스	문자(SMS) 안내	재난책임자(부단체장, 담당국장) 대상 음성 문자(VMS) 안내 추가
습설 예보 (농업인 조기경보)	강원·충청·전라·경북 운영	전국 운영
적설관측망 (레이저 적설계)	625개소	643개소(18 ↑)
도로기상관측망	7개 노선 259개소	12개 노선 366개소 (서산-영덕고속도로 등 5개노선 107개소 ↑)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8,075개소	8,761개소(686 ↑)
제설자원 현황 ('25.10월말 기준)	(제설제) 967,176톤	1,156,032톤(188,856 ↑)
	(소형제설장비) 4,661대	7,354대(2,693 ↑)
	(자동제설장치) 4,131대	4,762대(631 ↑)
	(제설전진기지) 890개소	936개소(46 ↑)
도로순찰 기준	6회 이상 + 노면온도 데이터 시분석을 통한 기준 개선 (강설이 없을 시 4회 이상으로 조정 가능)	도로살얼을 관리를 위한 제설제 살포 관련 규정 및 결빙취약구간 추가 (상습안개구간, 다중추돌 지점 등)
원예·특작시설 설계기준	(적설심,cm) 진도 22, 안산·용인·화성·수원· 군포·성남·과천 24 등 (풍 속,m/s) 봉화 24, 산청·연천·부안 28, 김제 30 등	(적설심,cm) 진도 24, 안산·용인·화성·수원· 군포·성남·과천 26 등 (풍 속,m/s) 봉화 26, 산청·연천 30, 부안 32, 김제 32 등

[한파] '25~'26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구분	'24~'25년	'25~'26년
한파 대책비 (재난특교)	약 40억 ※ 대설·한파 통합 지원	50억
집중관리 기간·지역	-	(기간) 12월 말~1월 중순 ※ 인명피해 다수 발생, 야외활동 증가 (지역) 경기·강원·충북 등 인명피해 다수 발생지역
지방정부 대응 체계	지방정부 재난부서 중심 대응	관계부서·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취약시간대(야간, 새벽 등) 집중 대응 강화
한파 쉼터	(운영시간) 미규정	(운영시간) 원칙 : 시설 운영 시간 특보시 : 야간 연장·휴일 개방
	(관리기준) 규모:16.5㎡ 이상 표지판:재질 및 크기 제한	(관리기준) 규모:적정 규모 표지판:재질 다양화 등 자율
보호대상 세분화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예시	3대 분야 10개 보호대상으로 세분화 △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 경제적(수급자 등, 주거취약자, 노숙인) △ 사회적(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노동자, 야외 활동자)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운영) 하·동절기 지원단가 별도 운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등인 세대	(운영) 하·동절기 지원단가 통합 운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인 세대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강원·충청·전라·경북 운영	전국 운영
실시간 수온 정보 (수온 관측망)	190개 지점	200개 지점(10↑)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27개 품목 적용 (농작물) 노력에 따른 재해보험 할인 20%	(양식수산물) 흰다리새우, 방어 등 30개 품목(3↑) (농작물) 재해보험 할인 25%(5%P↑)

# 한파심터부터 고속도로 제설까지, 한파·대설 선제적 대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파심터 운영 및 고속도로 제설 대책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5년 11월 28일 (금) 충북 충주시 한파심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파심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 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심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특보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서행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DPA**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기후재난관리과

#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포스터



##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 기상 상황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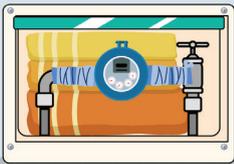
### 야외활동 자제



### 따뜻한 장소 휴식



###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 수도관 동파예방



###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대설경보** 습설 주의

5cm **대설우유보**  
20cm **대설경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제한 최고속도의 20%~50% 감속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정전·고립 대비, 생필품\*을 가정, 차량에 비치  
\* 비상조명, 보온물품(담요, 핫팩 등), 간편식, 식수, 연료 등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안전디딤돌 앱 >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on)

안전디딤돌 앱은 Google Play, ONE store, App Store에서 '안전디딤돌'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 고령층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초겨울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 떨어져

체온조절 반응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 자제해야  
노약자는 실외뿐 아니라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도 주의 필요



“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은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고,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며, 보호자분들께서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강  
조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  
계」를 통해 첫 사망자가 신고됨에 따라 한랭질환 등 초겨  
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  
가 미흡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  
는 체온유지 기능이 약한 민감군으로 날씨가 추운 경우 실  
외활동을 자제해야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월 22일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  
과(25.12.1.~25.12.18.) 총 6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93.7%가 저체온증, 68.3%가 65  
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인은 80대 여성으로 실외  
장소에서 발생했다.

##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개요 〉

- ◆ 신고주체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500여개)
- ◆ 신고기간 : 12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 ◆ 신고대상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  
\*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 침족병 등
- ◆ 신고체계 : 참여 응급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 관할 시도 → 질병관리청
- ◆ 결과환류 : 매일 16시 기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발생현황 게시

전년도 동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63명으로 약 1.6%로 감소하였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예방을 위해서는 외출하기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외출 시 보온을 위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입어 바람을 막고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면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분들은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고, “특히 한파 특보 발령 시 외출 등 야외활동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며, 보호자분들께서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KDPA**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

#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 ☑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 ☑ 외출 전 :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 외출 시 : 따뜻한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 한랭질환 증상 시 조치법 〉

-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 받기
-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 ☑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기
- ☑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37~38℃)에 담그기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 음식이나 보온(또는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주인, 동산객, 심야작업자 등)
- 술을 과음하거나 항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1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기
- 2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 3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기
- 4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 5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37~38℃)에 담그기

## 〈 한랭질환 건강수칙 〉

# 부산시, 한파 대비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

시,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번 쉼터 3곳 조성을 위한 국비 1억 2천만 원 확보… 신규 쉼터는 24시간 운영 쉼터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등 각종 편의시설 갖춰

시장, “이번 신규 쉼터가 촘촘한 노동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쉼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할 예정

“ 이번 신규 쉼터가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촘촘한 노동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쉼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부산시는 하단·명지·수영에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을 추가 조성해, 12월 4일 오후 1시 30분 사하구 이동(플랫폼)노동자 하단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산시장, 부산시의원, 사하구청장, (플랫폼)노동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여 비엔케이(BNK)부산은행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 혹한기 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대리 운전 기사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이 야외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시는 현재 3개 거점센터(△서면 △사상 △해운대)와 1개 쉼터(동래)를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조성(△하단 △명지 △수영)으로 총 7곳으로(거점센터 3, 쉼터 4) 늘어난다. ‘거점센터’에서는 △휴식분 아니라 △직무 안전교육 △심리·법률 상담 △교양·건강 강좌 △혈압 측정기 비치 등 다양

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쉽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이지만 24시간 운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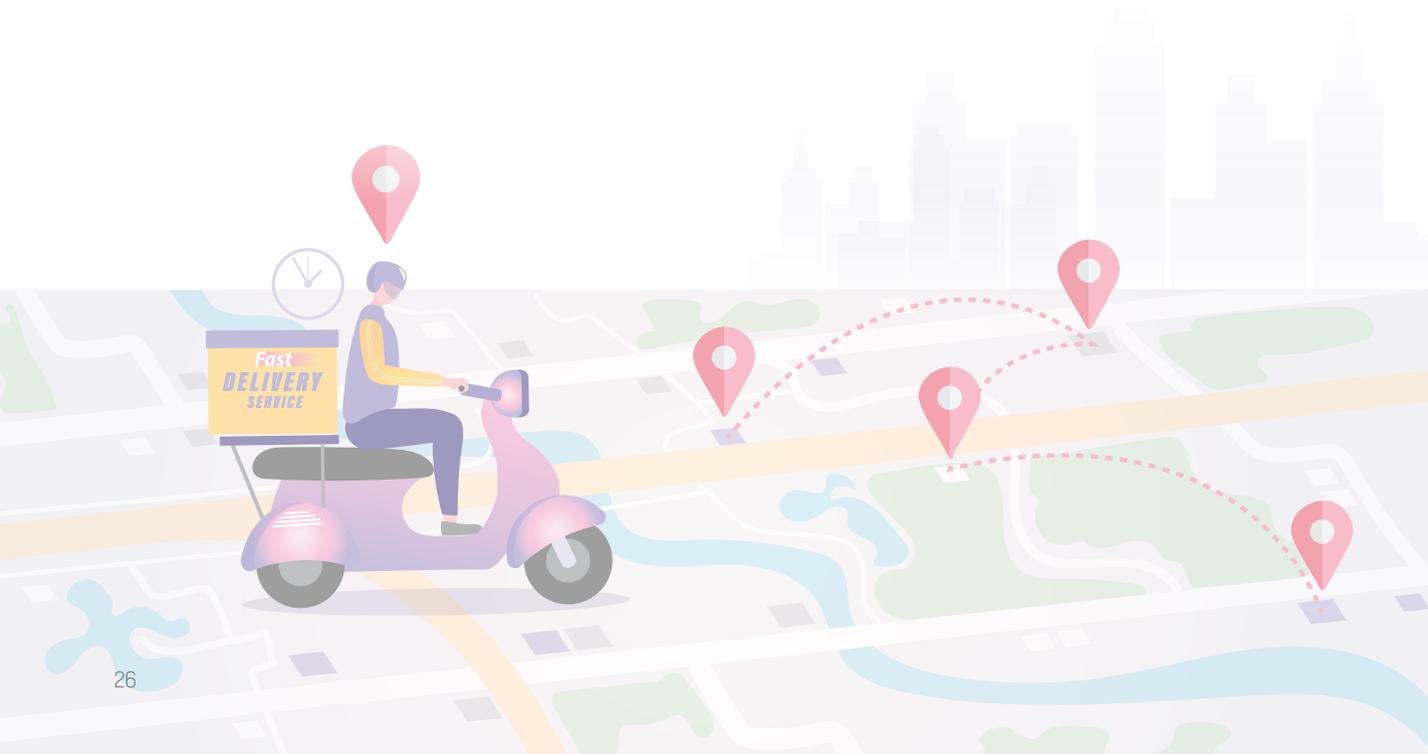
이동(플랫폼)노동자 쉽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24년 8만 561명이 다녀갔고, 2025년은 10월까지 9만 6천993명이 이용했다. 10개월 만에 전년 전체 이용자를 넘어서는 등 쉽터 수요 증가로 추가 쉽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는 혹서기(7~9월) 한시 운영 임시 쉽터 5곳(백스코 주차장 등)을 긴급 확충해 운영하는 등 쉽터 수요에 대응해 왔다.

시는 상설 쉽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이번 쉽터 3곳 조성을 위한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설치 희망 지역 설문조사 결과, 접근성과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하구 하단동(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인근 건물 임대) △강서구 명지동(너울공원 내 컨테이너 설치) △수영구 광안동(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지하상가 임대)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11월 공사 등 개소 준비를 마쳤다.

신규 쉽터는 30~70제곱미터(㎡) 규모로 △하단(69㎡, 약 21평), △명지(30㎡, 약 9평) △수영(42㎡, 약 13평) 24시간 운영 쉽터로 내부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각도 조절 의자(리클라이너),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쉽터는 이동(플랫폼)노동자 누구나 사전 등록(지문인식)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쉽터 추가 조성뿐 아니라 기존 거점센터 확장 이전 검토, 이용자 건강관리를 위한 체지방측정기 추가 비치 등 이동(플랫폼)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신규 쉽터가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촘촘한 노동 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쉼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DPA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 신규 센터 현장사진

- **하단센터**    ●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102호(하단동) [69.42㎡]



- **명지센터**    ● 강서구 명지국제6로220번길 30, 너울공원(명지동) [30㎡]



- **수영센터**    ● 수영구 수영로 지하 677, 임대시설물 45호(광안동) [42.49㎡]





# 부산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월동대책 시행

2025.11.15.~2026.3.15.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 동파·동결 등에 대비한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 시행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순찰 강화 △동파 시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지원 등으로 동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

△예방수칙 배부 △노후 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무료 교체 등을 통해 시민 자율적으로 예방토록 온오프라인 홍보 및 예방 활동 강화

“올해 겨울에도 일시적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수도계량기 동파 등 상수도 시설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발생 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의 동결·동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2024.11.~2025.3.)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1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작년 겨울철 93건보다 19퍼센트(%)가량 증가한 수치로, 영하 지속 일수와 영하권 일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기온 하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성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는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지난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된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여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167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총 298명(공무원 114명, 도급업체 184명)의 누수 수리, 동파 처리, 계량기 교체를 위한 민원해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응급 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출관, 대형 공사장 주변 등 동결·동파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부산의 온화한 기후로 계량기 등에 대한 보온대책이 미비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상수도 동결·동파 예방에 대한 홍보와 함께 노후화된 계량기 보호통 뚜껑과 보온재 무료 교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계량기 동파 예방 및 상수도시설 관리 요령 등을 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구·군별 지역주민센터에 홍보 전단지 배부하여 반상회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겨울에도 일시적으로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수도계량기 동파 등 상수도 시설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발생 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KDPA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부

## 노후 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무료 교체 지원

- ▶ 교체대상: 파손된 계량기 보호통 뚜껑 및 스티로폼 보온재
- ▶ 교체신청: 국번없이 120 전화 후 해당 지역 사업소로 요청
- ▶ 교체방법: 상수도 바로서비스팀의 현장직접 방문 및 무료 교체 실시



▲ 스티로폼 보온재 교체

# 동결·동파 예방수칙

## □ 세로형식



### 수도계량기(수도관) 동결·동파 예방수칙

겨울철 동파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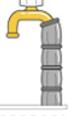
<b>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b>	 <p>계량기 뚜껑 파손 여부 확인 및 틈새 발생 차단</p>	 <p>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 헝겊 등으로 보온</p>
<b>옥내배관 동결 예방 방법</b>	 <p>화장실, 옥상물탱크 등 노출된 수도(꼭지)관은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보온</p>	 <p>옥상물탱크 물이 넘쳐 얼지 않도록 물탱크의 불탑 작동 여부 꼭 확인</p>
<b>수도계량기(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 방법</b>	 <p>헤어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따뜻한 물(40℃이하)을 서서히 계량기 주변에 부어 녹여주세요.</p>	 <p>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보호통내 밸브 잠그고 <b>국번없이 120</b> 신고</p>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가로형식



### 수도계량기(수도관) 동결·동파 예방수칙

<b>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b>	<b>옥내배관 동결 예방 방법</b>	<b>수도계량기(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 방법</b>
 <p>계량기 뚜껑 파손 여부 확인 및 틈새 발생 차단</p>	 <p>화장실, 옥상물탱크 등 노출된 수도(꼭지)관은 스티로폼, 헝겊 등으로 보온</p>	 <p>헤어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따뜻한 물(40℃이하)을 서서히 계량기 주변에 부어 녹여주세요.</p>
 <p>계량기 보호통내 보온재, 헝겊 등으로 보온</p>	 <p>옥상물탱크 물이 넘쳐 얼지 않도록 물탱크의 불탑 작동 여부 꼭 확인</p>	 <p>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보호통내 밸브 잠그고 <b>국번없이 120</b> 신고</p>



# 서울시,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1월 15일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시행…선제적 대응으로 지난해 33% 감소 성과  
보온덮개 두께 8mm로 강화, 디지털계량기 1만 개 확보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  
수도꼭지 2분간 ‘종이컵 한 잔’ 만큼 흘리기 등 생활 속 동파 예방 캠페인 병행

“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파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한 결과 동파 건수가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집중 관리,  
생활 속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개요〉

예보단계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판단기준 (최저기온)	-5℃ 이상	-5℃ ~ -10℃	-10℃ ~ -15℃ 2일이상 지속 예보	-15℃ 미만 2일이상 지속 예보
근무체계	기관별 자체 상황 유지 (야간은 당직근무로 대체)		24시간 상황실 구축 - 2교대 근무(09~18시, 18시~09시)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 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계식보다 동파에 약 4배 강한 디지털 계량기 1만 개를 추가 확보하여 동파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보단계와 동파 발생 규모에 따라 복구 인력을 단계별로 확대해 신속한 복구체계를 운영할 예정으로 최대 480명을 투입하여 일 2,500개 까지 복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동파예방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공동주택·공사현장 등 동파 취약지역에는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파가 이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간단한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 내부 동결로 인해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을 통해 동파 신고가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한 결과 동파 건수가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라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집중 관리, 생활 속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D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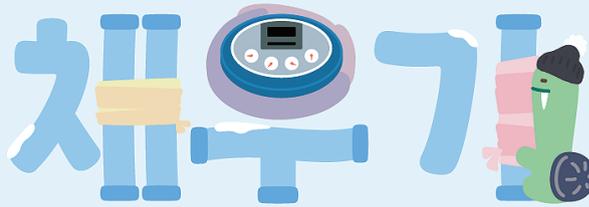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관리부

동해·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수도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워주고 주변 틈새를 덮어주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졸졸졸 흘려주세요



수도관(계량기)이 얼었을 때에는 50°C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여주세요

계량기 동파 시에는 120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해주세요

서울아리수본부  
Seoul Water



# 충청북도, 한파대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적절한 수분 섭취, 외출 시 보온 철저 등 건강 수칙 지키기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온도를 18~20℃로 유지하여 체온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준수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PA**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

### □ <응급의료기관 : 16개소>

구분	병원명	소재지	대표전화	
계	16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1, 지역응급의료센터7, 지역응급의료기관8)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269-6114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청주 (4)	한국병원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영운동)	222-7000
		효성병원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금천동)	221-5000
		한마음재단하나병원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가경동)	230-6114
		청주성모병원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주중동)	219-8000
	충주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동)	840-8200
	제천 (2)	제천서울병원	제천시 송문로 57 (서부동)	642-7606
명지병원		제천시 내토로 991(고암동)	640-8114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소)	청주 (2)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279-0114
		베스티안병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	910-7575
	충주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주시 안림로 239-50(안림동)	871-0114
	보은	보은한양병원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2	544-1500
	옥천	옥천성모병원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	730-7000
	영동	영동병원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	740-9000
	진천	중앙제일병원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2길 2-4	533-1711
	괴산	괴산성모병원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116	830-5400

### □ <응급의료시설 : 4개소>

구분	병원명	소재지	대표전화	
응급의료시설 (4개소)	청주 (2)	청주현대병원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65(비하동)	237-2114
		오창중앙병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683	218-0119
	음성	제일조은병원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30번길 10	883-8800
	단양	단양군보건의료원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420-0139

[브리핑 & 뉴스]

## 정책브리핑

- 01 | 행안부,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 02 |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 03 | 잦은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
- 04 | 새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05 | 사회재난 대비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 06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25 한국행정혁신대상' 대상
- 07 | 환경부,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 구조적 개편
- 08 | 빗물받이 정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능력 강화

P

Together for  
Safe Korea

A

# 행안부,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12월 3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 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수)부터 2026년 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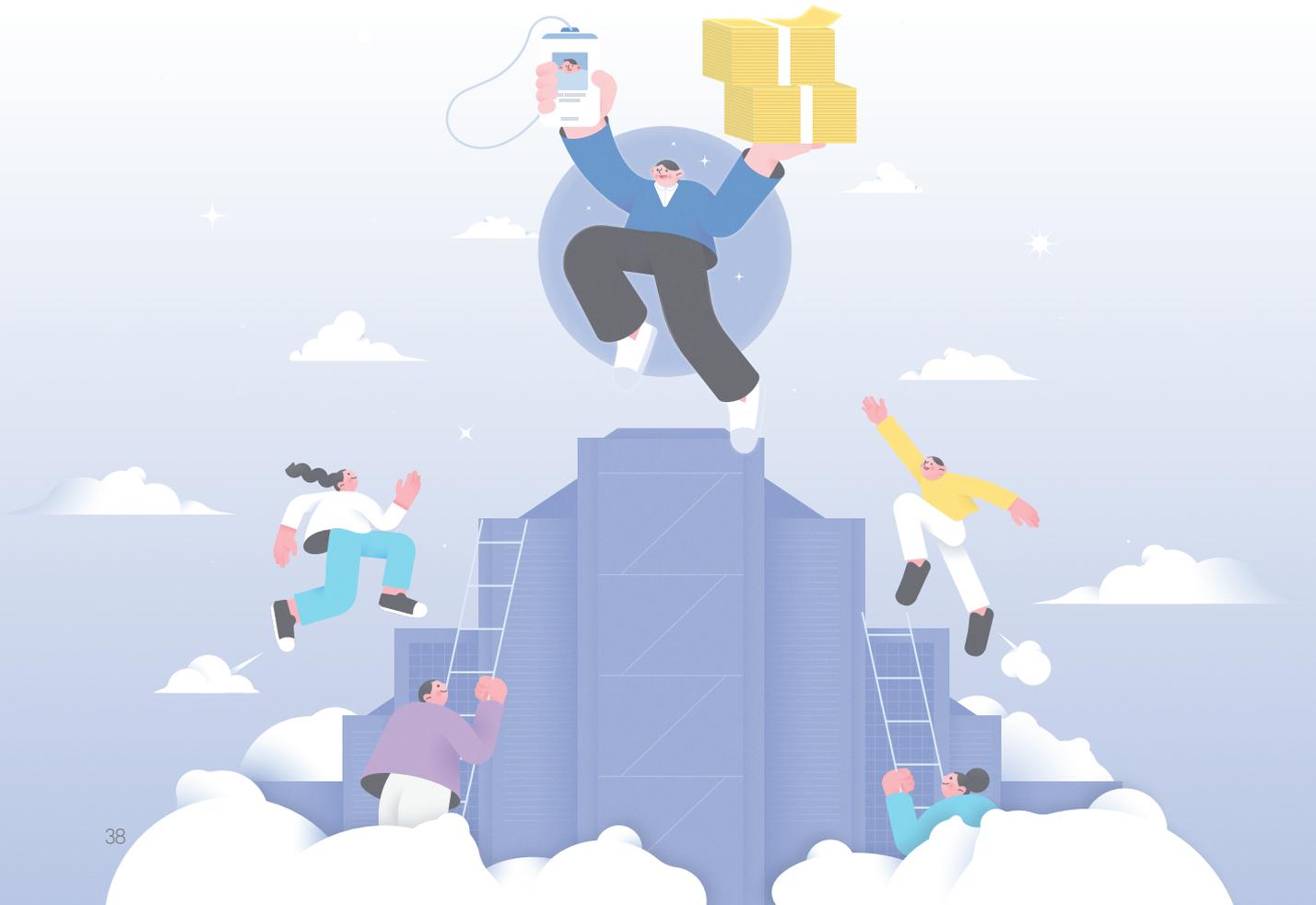
**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 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현행 결원 1명당 7배수(7등 이내)에서 결원 1명당 10배수(10등 이내)로 개선된다.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p>특별승진 기회 확대</p> <p>※ 임용령 연구지도직 규정(대통령령) 개정</p>	재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분야 4급 이하 성과우수자는 정원 내 특별승진 가능</li> <li>* (격무·기피업무 특별승진 대상) 재난·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분야 7급 이하 성과우수자 또는 정부포상 수상자를 정원 외 특별승진 허용</li> <li>* (격무·기피업무 특별승진 대상) 재난·안전 + 민원 분야 추가</li> </ul>
<p>근속승진 우대</p> <p>※ 임용령(대통령령) 개정</p>	재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재량)</li> <li>▶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 가능(재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속승진기간 2년 단축(의무)</li> <li>▶ 표창 수상자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재량)</li> </ul>
	민원	▶ 관련 규정 없음	▶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 면제(재량)
<p>승진 가산점 우대</p> <p>※ 임용령 연구지도직 규정(대통령령), 평정 규칙 개정</p>	재난 안전	▶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 후 가산점 부여(의무)	▶ 재난·안전 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의무)
	민원	▶ 관련 규정 없음	▶ 탁월한 실적 또는 민원 부서 근무경력에 따라 가산점 부여(의무)
<p>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p> <p>※ 임용령(대통령령) 개정</p>	5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원 1명당 7배수</li> <li>▶ 결원 2명당 5배수</li> <li>▶ .</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원 1명당 10배수</li> <li>▶ 결원 2명당 8배수</li> <li>▶ .</li> <li>▶ .</li> </ul>
<p>평정결과 공개범위 확대</p> <p>※ 평정규칙(부령) 개정</p>	5급 이하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임용권자 재량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 소방공무원 인건비 5,835억 원, 소방·안전 사업비 4,668억 원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한다. 이는 2025년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6.6%)한 규모이다.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56%)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44%)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5,835억 원)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총원한 소방공무원 수(총 1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업비(4,668억 원)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 일반수요 사업비(4,184억 원)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특수수요 사업비(484억 원)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 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 소방안전교부세

전국의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15.1%)과 함께 신설되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26년 1조 503억원



## 지방정부에 어떤 기준으로 교부하나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시·도별 **현장 부족인력 충원실적**에 따라 교부합니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소방안전시설 투자소요(40%)+노력도(40%)+재정여건(20%)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부합니다.

### 투자소요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화재위험, 소방출동지수, 안전신고, 지방도로·하천 현황 등

### 노력도

소방재정확대, 소방안전교육확산, 화재예방, 안전투자확대,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수 등

## 소방·안전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요?

### 소방분야

소방헬기, 소방정 등 대형장비부터 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기동장비, 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등 각종 장비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 안전분야

안전체험관, 보행환경 정비 등 대규모사업부터 지능형 CCTV, 교통안전시설, 산불예방, 안전문화 확산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단위: 억 원)

시도	'26년 (A=a+b)	'25년 (B)	전년대비 (A-B)	인건비 (a)	사업비(b)		
					합계 (b=c+d)	일반수요 (c)	특수수요(d)
<b>계</b>	<b>10,503</b>	<b>9,856</b>	<b>646</b>	<b>5,835</b>	<b>4,668</b>	<b>4,184</b>	<b>484</b>
서울	508	439	69	122	387	292	95 (소방헬기, 선박, 안전체험관, 보행환경)
부산	536	499	37	220	316	256	60 (소방선박, 안전체험관 등)
대구	456	385	71	174	282	221	60 (소방헬기)
인천	468	426	42	223	245	245	-
광주	316	282	34	87	229	229	-
대전	323	302	21	84	239	205	34 (안전체험관)
울산	384	368	16	124	259	205	54 (소방헬기, 보행환경)
세종	187	160	27	79	108	108	-
경기	1,348	1,379	△ 31	921	427	416	11.5 (소방선박, 안전체험관)
강원	783	725	58	509	274	249	25 (소방헬기, 보행환경)
충북	612	598	14	351	260	230	30 (소방헬기)
충남	818	778	40	551	267	257	10 (보행환경)
전북	624	593	31	365	258	248	10 (보행환경)
전남	892	878	14	607	285	267	18 (안전체험관, 보행환경)
경북	932	748	184	615	317	280	37 (안전체험관, 보행환경)
경남	961	951	10	638	323	294	29 (소방선박, 보행환경)
제주	355	344	11	164	190	180	10 (보행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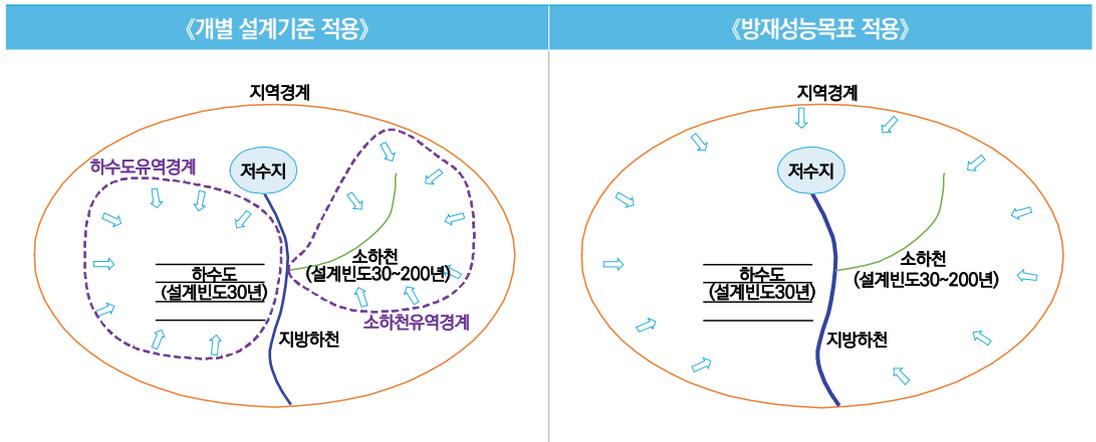
# 잦은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기상 여건을 각 지역의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이며, 소하천·하수도 등 개별 방재시설을 포함한 지역단위로 적용해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기후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근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 수를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GCM(Global Climate Model)은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 빙하 등 기후 시스템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여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18개)이다.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기상 여건을 각 지역의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DKA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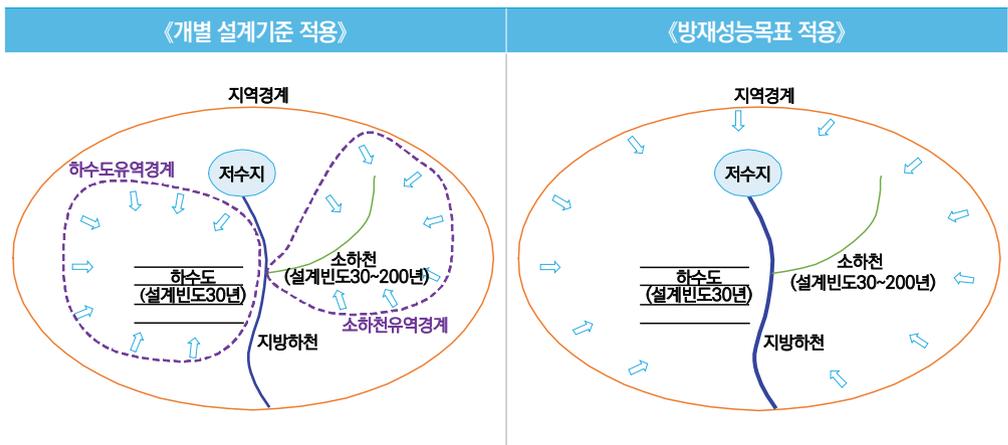


## 방재성능목표 개요

-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 ◉ (정의)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 ◉ (운영) 행안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통보, 지자체 설정 기준 검토 후 지역에 맞는 방재성능목표 공표·운영

## 방재성능목표 개념

- ◉ 방재성능목표는 개별 방재시설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은 아니며\*, 방재시설을 포함하는 지역단위\*\*로 적용해서 방재성능 평가 시 활용
  - \* 개별 방재시설 계획이나 설계 시에는 해당 설계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소하천은 소하천 설계기준을, 하수도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따른다.
  - \*\* 예를 들어 소하천, 펌프장, 하수관거를 포함한 대상 지역을 평가할 때, 이들 시설물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마련\*
  - \* 구조적 대책에는 유하시설(하천정비, 하수도 확장, 고지배수로 등), 저류시설(저류지, 펌프장 등), 침투시설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홍수예경보 및 대피체계 구축,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 새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 등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 【보장 강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는 ‘2배’ 경증

-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길 잘했다!**

# 풍수해대비해

**정부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대상 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상설적인 혜택을 받는 근본한 상해보험	주택, 농장, 소상공인(상가·공장)	태풍, 홍수, 조우, 강풍, 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가입문의**

OO손해보험 044-205-5990	H손해보험 044-205-5991	<b>국민재난 안전포털</b>  www.kaf.go.kr
K손해보험 044-205-5992	K손해보험 044-205-5993	
N손해보험 044-205-5994	H손해보험 044-205-5995	
meritz 044-205-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포스터 /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 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천만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천만원, 2차 4천만원)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천만원으로 2차 피해(4천만 원)는 미보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 [가입 편의] 매년 재가입 부담 완화, '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사회재난 대비 예방부터 수습까지 법적 안전망 마련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재난이란?

-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

※ 자연재난이란?

- 태풍·호우·강풍·대설·한파·폭염·지진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금)부터 2026년 1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에는 10·29이태원참사(‘22년), 12·29여객기참사(‘24년), 행정정보시스템 마비(‘25년) 등이 해당한다. 이에,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 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대비를 위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지방정부는 위기 형태별 감시 수단·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정부의 장이 지정하던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지정하고, 국가핵심기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재난 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 국민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너지, 수도, 통신, 환경,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이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이태원 참사나 12·29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구성

※ 5장 29개 조문으로 구성

구분		주요내용(조문명)
장	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회재난의 예방	제5조	사회재난의 예방조치 등
	제6조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8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비 및 관리
	제9조	주요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10조	주요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권고
	제11조	주요국가핵심기반의 보호·관리 등
	제12조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의 지정 등
	제13조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의 관리 등
	제14조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등
제3장 사회재난의 대비·대응	제15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제16조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제17조	다중운집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제18조	피해 방지 조치 등
	제19조	강제 조치 및 면책
	제20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등
	제21조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
	제22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 칙	제23조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분석·평가 등
	제2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제25조	보고 및 검사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 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25 한국행정혁신대상’ 대상

국경을 넘는 K-재난관리의 전파로 지구촌 안전 수준을 높여

“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각종 재난들을 토대로 구축한 이론과  
실천적 재난안전관리 방법론들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보급해서 글로벌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을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인정해 주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구촌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행정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행정혁신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중에서 행정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행정혁신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5년은 3회차이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K-재난관리 브랜드화 : 외국인 대상 ICT 중심의 교육 확산’ 사례가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형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 교육을 국가별 주요 재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전체 교육의 50% 이상을 실무 중심으로 편성한 이론-현장체험-실습이 결합된 패키지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강화사업(‘20~’25년, D-CAB, Disaster Risk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에서는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 담당자 321명을, 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24~’25년)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문영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각종 재난들을 토대로 구축한 이론과 실천적 재난안전관리 방법론들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보급해서 글로벌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을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인정해 주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구촌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 환경부,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 구조적 개편

산불예방, 초동진화, 역량강화 3대 혁신으로 국립공원 산불 총력대응

“기후위기로 격화되는 대형산불은 기존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빈틈없는 산불예방으로 산불 발생 방지

국립공원 각 공원사무소에서는 지형과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한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산불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첫째, 첨단감시와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산불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한다. 국립공원은 광범위한 육상면적(3,952km<sup>2</sup>)과 급경사지, 추락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기 등 과학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기, 불꽃 감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산불카메라를 현재 18대에서 2030년까지 231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국립공원 전체를 감시하고, 사물인터넷 산불조기감지시스템 도입\*으로 탐방객 안전과 직결되고 화재가 빈번한 지역(야영장 및 주차장 등)을 감시하

는 등 촘촘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순찰인력을 산불조심기간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둘째, 산불 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립공원 내 마을·사찰·문화유산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 주변에 내화력이 높은 활엽수림대를 조성해 녹색 방어선을 만든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실화 방지와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산불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셋째, 입산객·주민·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해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의 86%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입산객 실화 45건(54%), 주민 실화 27건(3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입산객, 주민, 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통해 원천적으로 산불을 방지한다. 입산객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금지구역 출입이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 실화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각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및 수거사업소 등 시설을 확충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조계종 등 민간 조직까지 협력을 강화해 합동훈련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2.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 확산 억제

산불은 발생 초기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때, 초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동진화도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국립공원별 산불지도 제작과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초동진화 전략을 고도화한다.** 산불위험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통합해 탐방로, 산불취약지역, 수원지 등을 나

타낸 산불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풍속 등 기상정보를 결합한 모의재현으로 산불 확산경로와 속도 등을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산불진화 전문차량 진입로와 진화 헬기 최적 동선 확보, 진화대 투입 등 국립공원별 산불진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돌입한다.

**둘째, 상황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전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초동진화팀을 즉각 투입한다.** 국립공원 재난안전 스마트폰과 실시간 산불 알림시스템 연동으로 산불 발생 시 담당자와 현장 인력에게 자동 문자를 발송해 산불을 즉시 확인하고, 발생지 지도를 함께 보내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국립공원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초동진화팀을 편성해 산불 발생 시 즉각 투입하고, 탐방로, 산림지역 등 발생지 특성을 고려한 초동진화팀 및 진화장비 적정 배치로 효과적인 산불 진화와 탐방객 보호를 수행한다.

**셋째, 국립공원공단 권역별 산불 진화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유관기관 협력으로 진화 자원·인력을 총력 투입해 초기부터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지역본부(4개소)·사무소(31개소)로 구성된 재난 협력망(네트워크)을 통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진화 상황이 공유되고, 진화 장비·인력을 상호 지원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국립공원 산불 총괄본부로서 지역본부와 공원사무소를 지휘하고, 공원사무소는 산불 진화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지역본부는 동·서·중·북부 4권역 체제로 운영되며 관할 공원과 사무소의 산불 자원을 파악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사무소에 인근 사무소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산불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

고하게 하고,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원 인력 파견 등 산불재난의 수습과 복구에 총력 대응한다.

### 3. 선제적 역량강화로 산불 대응능력 제고

기후변화로 재난이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는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재난관리 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 재난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국립공원공단에 재난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난 예측, 원인분석,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하고, 향후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와 사업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산불 안전대피 3·10·30(3분 입산객 교육, 산불 발생 10분 이내 긴급문자 발송, 30분 이내 초동진화·구조 돌입)'을 시행해 고지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 교육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문자 발송과 신속한 구조를 통해 탐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둘째, 산불진화전문차량과 진화헬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산불진화 능력이 크고 산악지형 운행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2025년에 2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0년까지 22대로 확충해 전 국립공원에 배치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주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 헬기를 현재 1대에서 2030년까지 4대로 확충·배치해 전 국립공원에 1시간 이내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초동진화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초대형산불과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국립공원 산불 관리과정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체의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를 통해 산불대응 기관의 헬기, 인력, 장비 등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지자체 담수지를 국립공원항공대가 활용하는 등 긴밀한 협업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로 격화되는 대형산불은 기존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요약)

### □ 추진 배경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 발생빈도와 초대형 확산 가능성 증가, 특히 '25년 초대형 산불 확산으로 국립공원에 상당한 피해\* 초래  
\* 주왕산 국립공원 3,260ha, 공원시설 17개소 / 지리산 국립공원 260ha
- 범부처 산불 종합대책 발표(10.22)에 이어 국립공원도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 재해에 대비한 맞춤형 혁신방안 마련

### □ 국립공원 산불 분석

- **(발생현황)** 국립공원은 '20년대 이전까지 산불 피해가 경미했으나, '23년 첫 대형산불(지리산)에 이어 '25년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

구분	합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4
발생(건)	84	9	7	5	4	10	8	4	18	13	1	5
피해(ha)	3,682.3	1.8	9.1	1.4	0.1	1.9	2.7	1.8	10.4	131	0.1	3,522

- **(발생원인)** 국립공원 산불은 최근 10년간 입산객 실화 45건(54%), 주민 실화 27건(32%) 등 사람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86%)을 차지

### □ 주요 내용

#### ① 빈틈없는 산불예방으로 산불 발생 방지

- **(감시)** 산불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찰 인력을 산불 취약시기·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골든타임 확보
  - AI산불카메라로 촘촘한 감시망 구축, IoT조기감지시스템\*으로 산불 취약지역 감시 강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고도화  
\* 인력으로 국립공원의 넓은 육상면적(3,952km<sup>2</sup>)을 감시 하기에는 한계
  - 산불감시원 등 순찰인력의 취약시간·지역 집중 배치로 감시 효율성 제고

- **(방어 인프라)** 공원에 인접한 마을, 사찰 주변에 내화수림대 조성 및 소화물품 지원으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산불 인프라 구축

  - 주거지 주변 내화력 높은 활엽수림대 조성 및 공원 내 마을에 옥외소화전 설치,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등 지원으로 산불 확산 차단·지연
- **(예방 활동)** 국립공원 산불 원인의 약 86%인 인위적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객, 주민 관리 강화 및 다양한 조직과 예방활동 협력

  - 입산객 대상 일부 탐방로 통제 및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확대로 주민 소각화재 방지
  -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조계종 등 민간 조직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합동훈련, 홍보 협업 등 실시

### ㉒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 확산 억제

- **(진화 전략)** 산불 발생시 확산 예측, 장비·인력 진입로 등을 나타낸 산불지도(가칭조닝맵)를 제작하고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진화전략 수립

  - 국립공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불지도를 제작하고 산불 시뮬레이션, AI 모델링 등 고도화를 통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진화전략 결정
- **(초동 진화)** 상황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신속하게 산불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진화팀(31개 사무소 79팀) 즉각 투입, 신속 진화로 산불 확산 억제
- **(상호 지원)** 공단 본사-지역본부(4개소)-사무소(31개소) 권역 네트워크로 산불 진화·지원체계 통합, 산불 유관기관 협력체계로 장비·인력 지원

### ㉓ 선제적 역량강화로 산불 전문성 확보

- **(재난 관리)** 공단 본사에 재난·안전 담당 조직(이사급)을 구성해 산불 통합지휘·조정 역할 수행, 장기적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 \* 국립공원 이사 정수 변경 및 재난사업 명문화 개정 완료(10.26. 본회의 통과)
- **(장비인력)** 산불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산불진화전문차량(4대→22대), 진화헬기(1대→4대)를 확충하고 산불전문인력\*(264명) 별도로 편성

  - \* 6명(구조-산불진화시 최소투입 인력) × 2조(교대 근무) × 22개 국립공원

# 빗물받이 정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능력 강화

전국 빗물받이 408만여 개소 점검 및 토사·쓰레기 제거 등 정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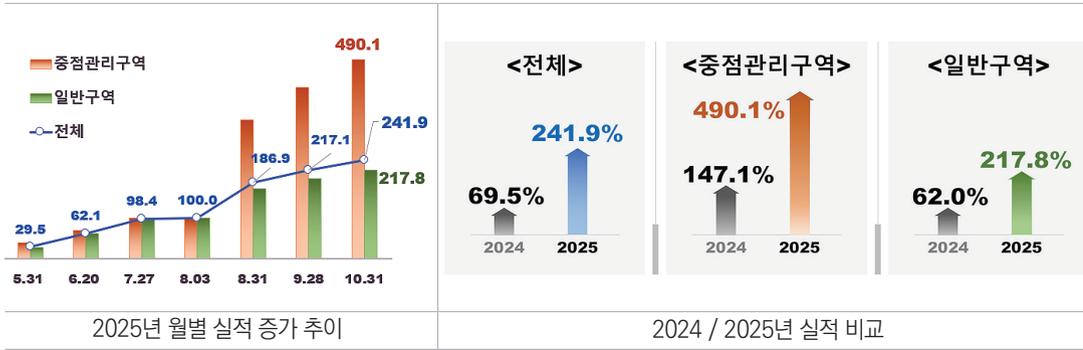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에 떨어진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수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6.12.)에 따라, 토사·쓰레기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를 사전에 점검·청소해 배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공동 단장)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 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을 통해 정비 실적 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2025년 빗물받이 정비율(10월 말 기준)은 241.9%이며, 이 중 중점관리구역(36만여 개소)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 〈 전국 빗물받이 정비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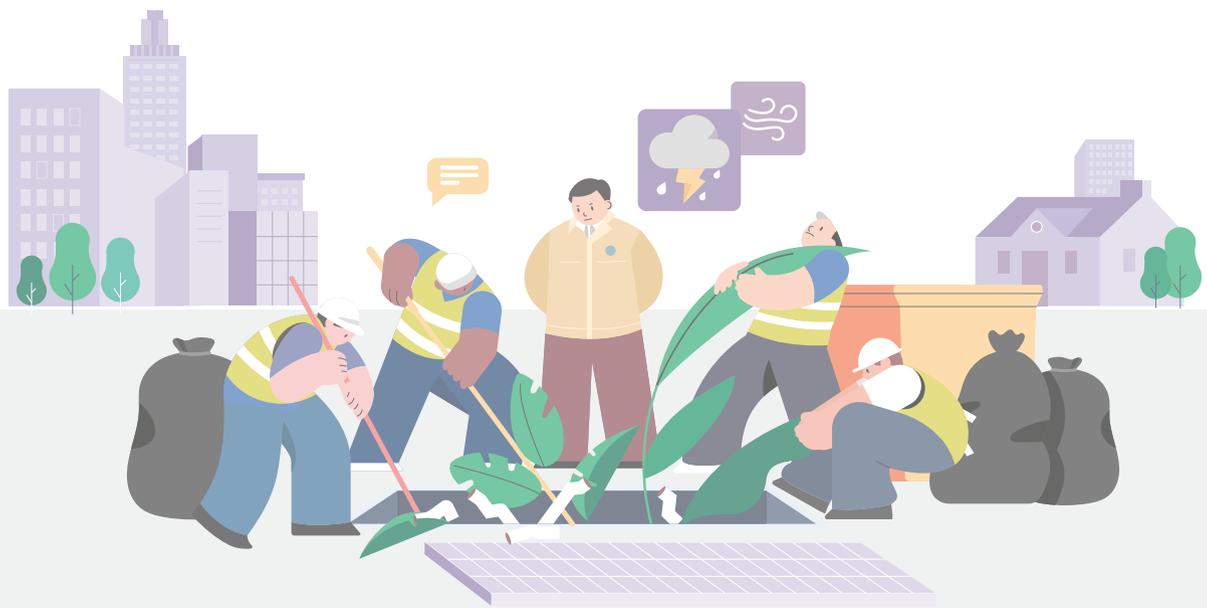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빗물받이 관련 민원 2만 9,200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2026년 예도 우기 이전인 5월부터 전담팀을 다시 가동해 빗물받이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은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지자체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 (10월말 기준)

### □ 총괄 실적 : 2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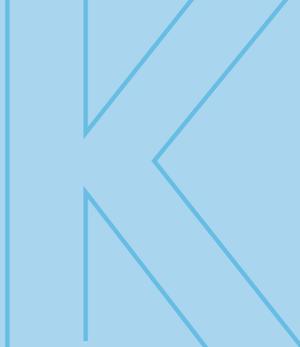
구분	관리대상(개소)	점검·청소(횟수)	(누적)정비율(%)	비고(2024년, %)
전체	4,082,312	9,875,413	241.9	69.5
중점관리구역*	361,052	1,769,389	490.1	147.1
일반구역	3,721,260	8,106,024	217.8	62.0

\*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 □ 시·도별 실적

(단위 : 개소, 회, %)

시도	관리대상			점검·청소 실적		
	전체	중점관리구역	일반	전체	중점관리구역	일반
계	4,082,312	361,052	3,721,260	9,875,413 <sup>(241.9)</sup>	1,769,389 <sup>(490.1)</sup>	8,106,024 <sup>(217.8)</sup>
서울	568,623	34,799	533,824	1,499,839 <sup>(252.5)</sup>	521,985 <sup>(1,500.0)</sup>	977,854 <sup>(183.2)</sup>
부산	130,564	11,556	119,008	231,327 <sup>(172.9)</sup>	33,466 <sup>(289.6)</sup>	197,861 <sup>(166.3)</sup>
대구	167,139	5,740	161,399	283,662 <sup>(167.2)</sup>	34,406 <sup>(599.4)</sup>	249,256 <sup>(154.4)</sup>
인천	177,181	605	176,576	312,550 <sup>(171.6)</sup>	2,667 <sup>(440.8)</sup>	309,883 <sup>(175.5)</sup>
광주	83,613	4,238	79,375	184,179 <sup>(217.8)</sup>	24,919 <sup>(588.0)</sup>	159,260 <sup>(200.6)</sup>
대전	146,958	5,144	141,814	215,656 <sup>(145.1)</sup>	25,616 <sup>(498.0)</sup>	190,040 <sup>(134.0)</sup>
울산	70,447	2,080	68,367	144,298 <sup>(202.5)</sup>	5,665 <sup>(272.4)</sup>	138,633 <sup>(202.8)</sup>
세종	25,553	1,204	24,349	84,878 <sup>(319.6)</sup>	5,429 <sup>(450.9)</sup>	79,449 <sup>(326.3)</sup>
경기	895,637	35,148	860,489	1,439,503 <sup>(157.6)</sup>	89,185 <sup>(253.7)</sup>	1,350,318 <sup>(156.8)</sup>
강원	200,782	29,952	170,830	344,025 <sup>(169.3)</sup>	56,182 <sup>(187.6)</sup>	287,843 <sup>(166.6)</sup>
충북	163,399	34,593	128,806	381,322 <sup>(230.5)</sup>	86,051 <sup>(248.8)</sup>	295,271 <sup>(226.3)</sup>
충남	180,455	26,320	154,135	492,375 <sup>(265.9)</sup>	154,796 <sup>(588.1)</sup>	337,579 <sup>(213.5)</sup>
전북	178,882	3,479	175,403	276,719 <sup>(152.4)</sup>	8,013 <sup>(230.3)</sup>	268,706 <sup>(151.0)</sup>
전남	301,693	80,879	220,814	2,123,894 <sup>(668.6)</sup>	489,783 <sup>(605.6)</sup>	1,634,111 <sup>(702.3)</sup>
경북	197,506	52,514	144,992	421,088 <sup>(210.8)</sup>	129,434 <sup>(246.5)</sup>	291,654 <sup>(198.7)</sup>
경남	445,517	22,996	422,521	1,160,621 <sup>(250.4)</sup>	82,687 <sup>(359.6)</sup>	1,077,934 <sup>(245.4)</sup>
제주	148,363	9,805	138,558	279,477 <sup>(188.2)</sup>	19,105 <sup>(194.8)</sup>	260,372 <sup>(187.7)</sup>



## [브리핑 & 뉴스]

# 지자체뉴스

- 01 | 경상남도, 호우피해 복구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 02 | 부산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
- 03 |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04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 민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 강화
- 05 | 대전시, 위기관리 매뉴얼 전국 모범사례 됐다



Together for  
Safe Korea



# 경상남도, 호우피해 복구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재해복구 2,602건 209건 완료, 1,225건 설계 중, 1,168건 공사 중  
경상남도,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추진실태 집중점검(10.20.~11.19.)

“ 피해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나섰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재해복구 사업의 중앙심사(30억 이상)와 도심사(10억 이상)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경남도는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해 2026년 우기 전 피해 복구 완료를 목표로 재해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공시설, 사유시설 항구복구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1조 1,947억 원 규모의 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9월 초까지 재해복구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산청군, 합천군 등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8월 말까지 산사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시설하우스 등 사유시설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시군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1월 말 민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부분 완료(91%)됐고,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2,602건 중 209건(8%) 완료, 1,225건(47%) 설계 중, 1,168건(45%) 공사 추진 중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1월 18일에는 도·시군 재해복구사업 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계약·행정절차 신속 추진, 실시설계 마무리, 조속한 공사 시행을 독려했다.

피해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나섰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재해복구사업의 중앙심사(30억 이상)와 도심사(10억이 상)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설계의 경제성검토(VE) 생략 등을 비롯해 계약심사 제외, 긴급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복구사업’은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능복원’ 사업과 ‘개선복구’ 사업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6년 우기 전 위험지구 우선 사업 완료로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복원 사업은 피해시설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개선 복구사업은 인명·시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폭 확장, 제방고 상승,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배수정비 등 방재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경남도는 2026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고, 피해가 극심했던 산청군 등 시군의 공무원을 직무 파견받아 재해복구사업을 전담 추진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1월 21일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집중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 산청군 산청읍 재해복구현장 모습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재해복구현장



산청군 산청읍 내리 재해복구현장

##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대책

구분		재해복구사업	일반건설사업
용역 관련	계약심사(원가심사) * 7천만원이상(시군), 2억원이상(시도)	제외	7일
	일상감사 * 5천만원이상	7일 (발주 후)	7일 (발주 전)
	입찰공고	긴급 (5일)	7~40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심사)	8일	14일
	수의회약	1억 이하	1억 이하
	용역기간	3~6개월	6~12개월
	사전심의 (시도, 행정안전부)	○	-
	설계의 경제성등(VE) 검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일 (생략가능)	30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특법 1·2종 대상, 지하100m 이상 굴착 등)	20일	20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작성공고		○	○
공사 관련	계약심사(원가심사) * 3억원이상(시군구), 5억원이상(시도)	제외	7일
	일상감사 * 1억원이상	7일 (발주 후)	7일 (발주 전)
	입찰공고	긴급 (5일)	7~40일
	적격심사	8일	14일
	분할계약(공구분할)	허용	금지
	수의회약	건설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건설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유관기관 공공시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절차 등 단축	-
	공사기간	소 규모 : 연 내 완료 기능복구 : 우기전 완료 개선복구 : 우기전 주요공정 완료	6~36개월

## 부산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

11.28. 11:00 동래구 수민어울공원에서 준공식 개최… 시장, 시의원, 동래구청장, 시민 등 200여 명 참석

상습침수지 수민동 일원 3만 5천 톤 빗물 저장… 집중호우 피해 시달리던 동래구 수민동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가능해져

부산시장, “상부 공간에는 향후 주민들이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될 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민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해

---

“ 이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반복된 침수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시설 상부 공간에는 향후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될 공원을 조성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민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

부산시는 11월 28일 오전 11시, 동래구 수민어울공원에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상습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시달려 온 동래구 수민동 일원의 재해 예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부산시장을 비롯해 동래구청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완료를 축하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단기간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배수 체계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로, 저류조·저류지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빗물의 유출을 지연하고 하천 및 하류 지역의 홍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09년 7월, 2014년 8월, 2017년 9월 등 반복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던 수민 지구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시와 동래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6일 착공 △2025년 10월 31일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준공식 모습 /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에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로 476억 원(국비 238억 원, 시비 184.25억 원, 구비 53.75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시설은 시 최대 규모인 3만 5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그간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동래구 수민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의 상부 공간에는 향후 7,132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 침수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부족한 도시 녹지를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휴식·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열섬 완화·환경 개선·도시경관 향상 등 다층적인 도시 혜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반복된 침수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시설 상부 공간에는 향후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될 공원을 조성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민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KDPA**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 추진배경 >

- 상습 침수지의 침수 피해 예방,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 상습 침수지역 해당하는 동래구 수민동 일원의 홍수량 저감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행
- ※ 부산 최대규모 우수저류시설(V=35,000m<sup>3</sup>)

### □ 사업개요

- ① **사업명** :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② **위치** : 동래구 수민어울공원 일원 (사업부지 일원)
- ③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설치 V=35,000m<sup>3</sup> 등
- ④ **사업비** : 476억원(국비 238, 시비 184.25, 구비 53.75)  
※ 재원부담 : 국비 50%, 지방비 50%
- ⑤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5년 10월(준공)

### □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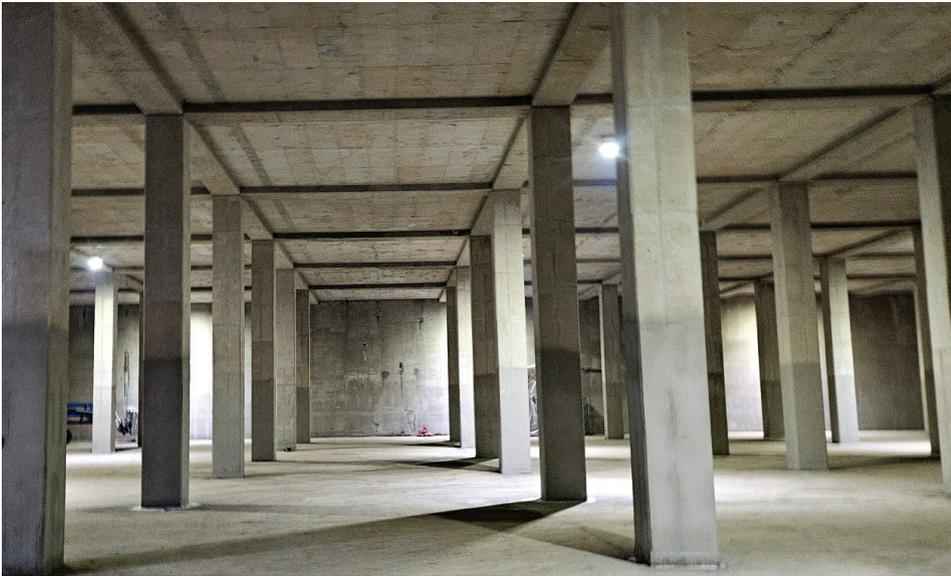
- ① **2019. 9.** :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 선정(행정안전부)
- ② **2020.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③ **2021.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④ **2022. 1.** : 공사 착공 (※ 착공일: 2022.01.06.)
- ⑤ **2025.10.** : 공사 준공 (※ 준공일: 2025.10.31.) 【 공정률 100% 】

### □ 우수저류시설 효과 (기대 효과)

- ① 부산 최대규모 우수저류시설(V=35,000m<sup>3</sup>) 설치 완료로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예방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 안전 확보, 재산권 보호
- ②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등의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해당 상습 침수지역의 안전 확보가 가능함에 따른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

##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

□ 부산광역시 최대규모 우수저류시설 V=35,000m<sup>3</sup>



#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으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10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중 하수관 이음부·접합부 손상 44%...핵심 원인 선제 보수

본관 이음부 수밀성·지지력 강화하고, 연결관 접합부 '일체형 단지관'으로 국소 단위 정밀보수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패러다임 전환...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방향 전환

“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  
(Life-Cycle)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 〈 이음관 + 기초받침 〉



⇒ 관로 이탈 방지 및 수밀성 확보, 부등침하 방지

< 일체형 단지관 >



⇒ 연결관 접합부 주변 파손 부위만 국소 단위 보수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 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합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한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수밀성 저하인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해나간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Repair)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갱신(Renovation), 마지막으로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Replacement)를 선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립한다.

한편 서울시는 굴착 없이 관 내부에서 보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신규 보수공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보수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규모 굴착을 줄여 소음·먼지·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낮추고 공사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Life-Cycle)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DPA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시범사업(이음관+기초받침) 시공 사진



터파기 및 기존관 제거



이음관+받침 레벨측량



하수관 부설



하수관 부설



연결부 실측 후 받침설치



하수관 레벨측량



이음관 체결



이음관 체결



뒤메우기

## 하수관로 주요 손상 및 결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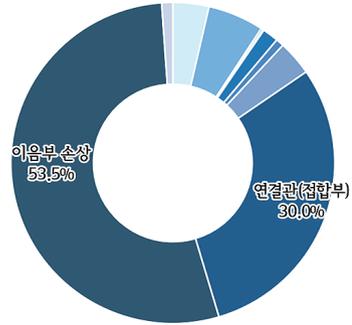
### □ 최근 10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중 이음부·접합부 손상이 44%

구분	계	이음·접합부 손상	노후관로 손상	구조를 파손 (맨홀, 빗물받이)	개인설비 손상	기타
건수	111건	49건	46건	6건	7건	3건
비율	100%	44.1%	41.5%	5.4%	6.3%	2.7%

### □ 관로 내부조사 결과 결함항목의 85%가 이음부·접합부 손상

#### 〈 노후관 결함비율 〉

결함 항목	균열	표면 손상	라이닝 결함	좌굴 변형	파손 붕괴
	3.6%	5.6%	0.2%	0.1%	1.6%
	영구 장애물	천공	연결관 (접합부)	이음부	침하 역경사
	0.8%	3.5%	30.0%	53.5%	1.1%



※ '25년 소구역 기술용역 관로내부조사 판독결과

### □ 노후관 주요 결함상태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 민관 협력으로 재난 대응 강화

재난안전 유관기관·민간단체, 2026년 안전관리계획 보고회 개최  
민간단체 우수 경험·지식 공유...안전문화 확산 기대  
김관영 전북지사, “민관 협력으로 안전한 지역 만들자”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손잡고  
더욱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2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전관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6년도 안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025년 민간단체의 활동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전북자치도 안전정책 방향 공유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우수활동 발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도지사 표창 수여와 2026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 보고, 2025년 재난안전 민간단체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단체 구성원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한 임실군 안전모니터봉사단 라철호, 선제적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에 힘쓴 전주시 자율방재단 양해성 등 5명이다. 이들은 높은 안전의식과 적극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 보고회 개최 모습

이어 관계자는 2026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재난안전 유관기관 실무위원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난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방안과 도민 안전문화 확산 과제를 담았다.

2025년 여름 폭염과 최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도는 이날 안전 정책 공유를 통해 재난대응·복구와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에서 민관 협력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2025년 5개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도 발표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복구에서 헌신한 자율방재단, 산불 현장에서 고령 어르신을 대피시킨 의용소방대원, 실종자 수색과 야간 순찰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온 자율방법대의 사례가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재난안전 민간단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손잡고 더욱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KDPA**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 2026년 안전관리계획 보고회

### □ 표창대상자 명단 (5명)

표창대상	공적내용	비고
군산시 안전보안관 이석로	• 지역 예찰활동, 위험요소 신고로 안전 생활 이바지	
임실군 안전모니터봉사단 라철호	•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활동 적극 수행	
전주시 자율방재단 양해성	• 선제적인 재난 대응, 복구지원 이재민 구호활동 수행	
무주 의용소방대 유현숙	• 각종 화재, 구조 현장 지원, 안전계도	
도 자율방범연합회 정진정	• 지역 치안 질서 유지, 학교폭력 예방	

### □ 우수사례 발표 (5개 단체)

단체명	발표자	주 제
군산시 안전보안관	이석로	• 안전신문고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지역 안전 강화
임실군 안전모니터봉사단	라철호	•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 안전모니터봉사단
전주시 자율방재단	양해성 (전주시 단장)	• 함께 성장한 전주시 자율방재단 1년의 성과
진안 의용소방대연합회	박관우 (진안 의용소방대 남성회장)	• 지역안전지킴이 2025년 의용소방대 성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정진정 (도 연합회 사무처장)	•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자율방범대



# 대전시, 위기관리 매뉴얼 전국 모범사례 됐다

행안부 주관 2025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시계열별 담당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대전시는 1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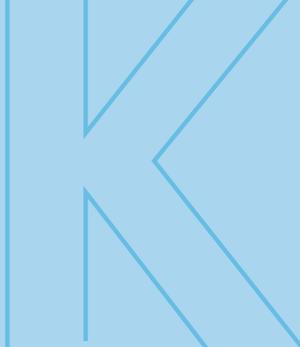
대전시가 구축한 재난 대응체계가 지자체 최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 강화, 위기 대응 수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대회다.

대전시는 그동안 변하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장작동성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지난 1월부터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하였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시계열별 담당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대전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훈련의 내실화 등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브리핑 & 뉴스]  
**회원사뉴스**

- 01 | LH,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도입
- 02 | “시 기반 미래형 수도 기술을 한눈에” 한국수자원공사, 'waterAX' 개시
- 03 | 한국수자원공사, 향후 10년 물의 미래를 밝힐 '미래 물 기술 20선' 공개



Together for  
Safe Korea



# LH,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도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저감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기여  
공공주택 옥외공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단계적 적용 확대

“이번 스마트 관수 시스템은  
수목 하자 저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 및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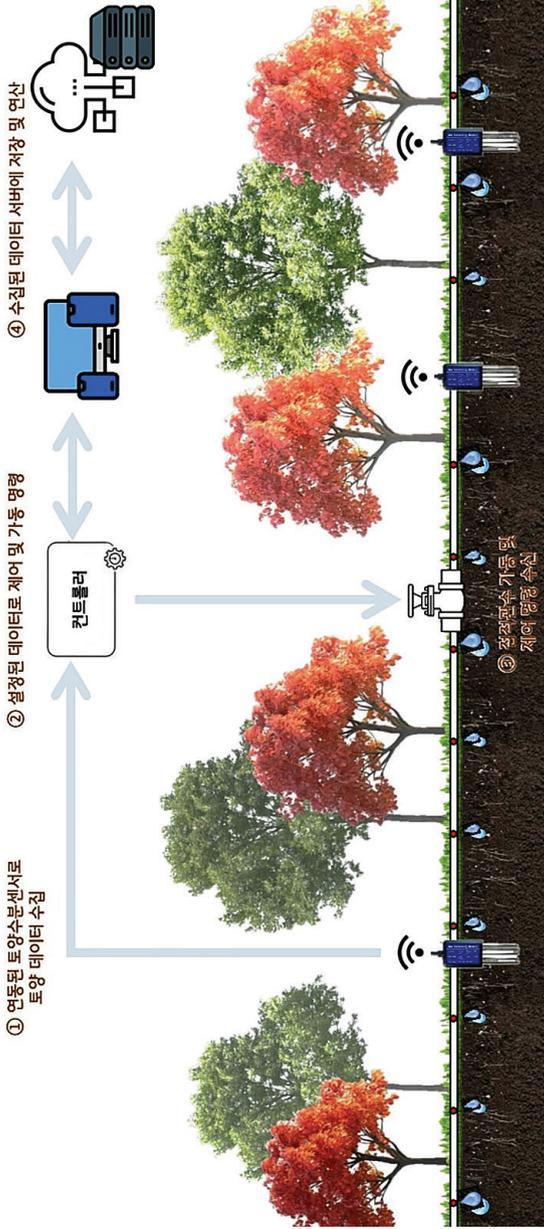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식물 고사 우려 및 유지관리 어려움이 커지자, LH는 공공주택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은 식물에 필요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관수 시스템이다. 토양수분센서 및 기상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목에 필요한 물을 정밀하게 제공하여 토양 내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액상 비료 자동공급 시스템과도 연계돼 수목 생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해당 시스템을 행복도시 5-1L13 단지와 대구연호 A-3단지에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스마트 관수 시스템은 수목 하자 저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 실현 및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개념도

## 1) 스마트자동관수 시스템



- ① 연동된 토양수분센서로 토양 데이터 수집
- ② 설정된 데이터로 제어 및 가동 명령
- ③ 정적관수 가동 및 제어 명령 수신
- ④ 수집된 데이터 서버에 저장 및 연산

데이터에 의한 관수 제어 및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 반영

< 스마트 자동관수 시스템 개념도 >

## “AI 기반 미래형 수도 기술을 한눈에” 한국수자원공사, ‘waterAX’ 개시

AI 정수장, DT 등 핵심 수도 기술 온라인 체험으로 기술 이해도 및 접근성 강화  
기술 수준 자가 진단, 현장 데이터 기반 기술 컨설팅으로 사업화 및 의사결정 지원

“waterAX는  
그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축적해온  
수도 디지털 솔루션을 집약한 포털로,  
기술 이해도 제고뿐 아니라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물산업  
이해관계자와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2월 15일 수도 디지털 기술을 온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도 디지털 기술 체험 포털 ‘waterAX’ (<http://waterax.wateround.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 W)’에서 열린 수도 AX 심포지엄에서 waterAX를 선공개 하며 주요 기능과 활용 가능성을 공유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한 AI 정수장, 정수장 디지털트윈, 관로 디지털트윈, 자산관리체계 등 디지털 기반 수도 기술은 현장 방문으로만 시연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시한 waterAX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플랫폼 방문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수도 기술에 대해 온라인에서 실제 운영환경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사업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술별 핵심 기능과 경제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사업기획 단계에서 기술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waterAX 누리집 홈 화면. AI 정수장, 정수장 디지털트윈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수도 기술의 소개와 체험 기능을 제공한다.



waterAX 주요 기술 소개 화면. 한국수자원공사의 AI 정수장, 정수장 디지털트윈, 관로 디지털트윈, 자산관리체계 등 디지털 기반 주요 기술을 실제 운영환경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waterAX에 기술 수요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의 디지털 기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 평가 기능을 탑재하고, 나아가 수요자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 수준 진단과 시범 적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신규 솔루션 추가, 사용자 편의성 개선, 모델 최적화, 사용자 피드백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 waterAX를 수도부문 디지털 솔루션의 대표 체험 및 사업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waterAX는 그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축적해온 수도 디지털 솔루션을 집약한 포털로, 기술 이해도 제고뿐 아니라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물산업 이해관계자와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KDPA**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디지털부

# 한국수자원공사, 향후 10년 물의 미래를 밝힐 ‘미래 물 기술 20선’ 공개

미래 물관리 방향을 안전(S)·건강(H)·지능(I)·친환경(N)·참여(E)의 5대 가치로 제시  
’35년 실용화를 목표로 핵심 물 기술 20개 중장기 R&D 추진  
AI·디지털 전환과 물-에너지 융합 기술 등 미래 물관리 경쟁력 강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물관리도 미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번에 제시한 20대 미래 물 기술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리는 2035년을 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기술 기반의 물관리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2월 8일 기후·기술 변화가 본격화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해 20대 미래 물 기술을 선정해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R&D)과 현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고, 산업·생활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의 등장으로 정수처리 난도가 높아지는 등 물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첨단산업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로 물 인프라 운영 방식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물 수급 안정, 오염원 대응력 강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물관리 전반의 기술적 대응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10년을 기후·기술·환경 변화가 집중되는 ‘핵심 전환기’로 보고 미래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물환경 변화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10년의 복합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정수장,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 등 현재 기술 역량에 미래 수요를 접목한 실용 기술 중심의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

20대 미래 물 기술은 '물 기술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혜택을 누리는 밝은 미래(SHINE : Safe, Healthy, Intelligent, Net-zero, Engaging)'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국내외 기술 트렌드 분석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추려졌으며, ▲ 안전한 물 ▲ 건강한 물 ▲ 똑똑한 물 ▲ 친환경적인 물 ▲ 함께하는 물의 5대 가치로 구조화됐다.

'안전한 물' 분야는 홍수·가뭄 등 재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된다. AI 기반 홍수 예측, 위성 활용 침수 감시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한 물' 분야는 과불화화합물(PFAS)처럼 잘 분해되지 않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다룬다. '똑똑한 물' 분야는 AI·로봇·센서 등을 활용해 물 인프라가 스스로 점검하고 운영되는 지능형 관리 기술로 구성됐다. '친환경적인 물' 분야는 수상태양광, 수소 기반 전력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한다. '함께하는 물' 분야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유역 계획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물관리 기술을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별 실용화 가능성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변화하는 기술·환경 요인을 반영해 지속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과 현장 적용을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물관리도 미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에 제시한 20대 미래 물 기술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리는 2035년을 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기술 기반의 물관리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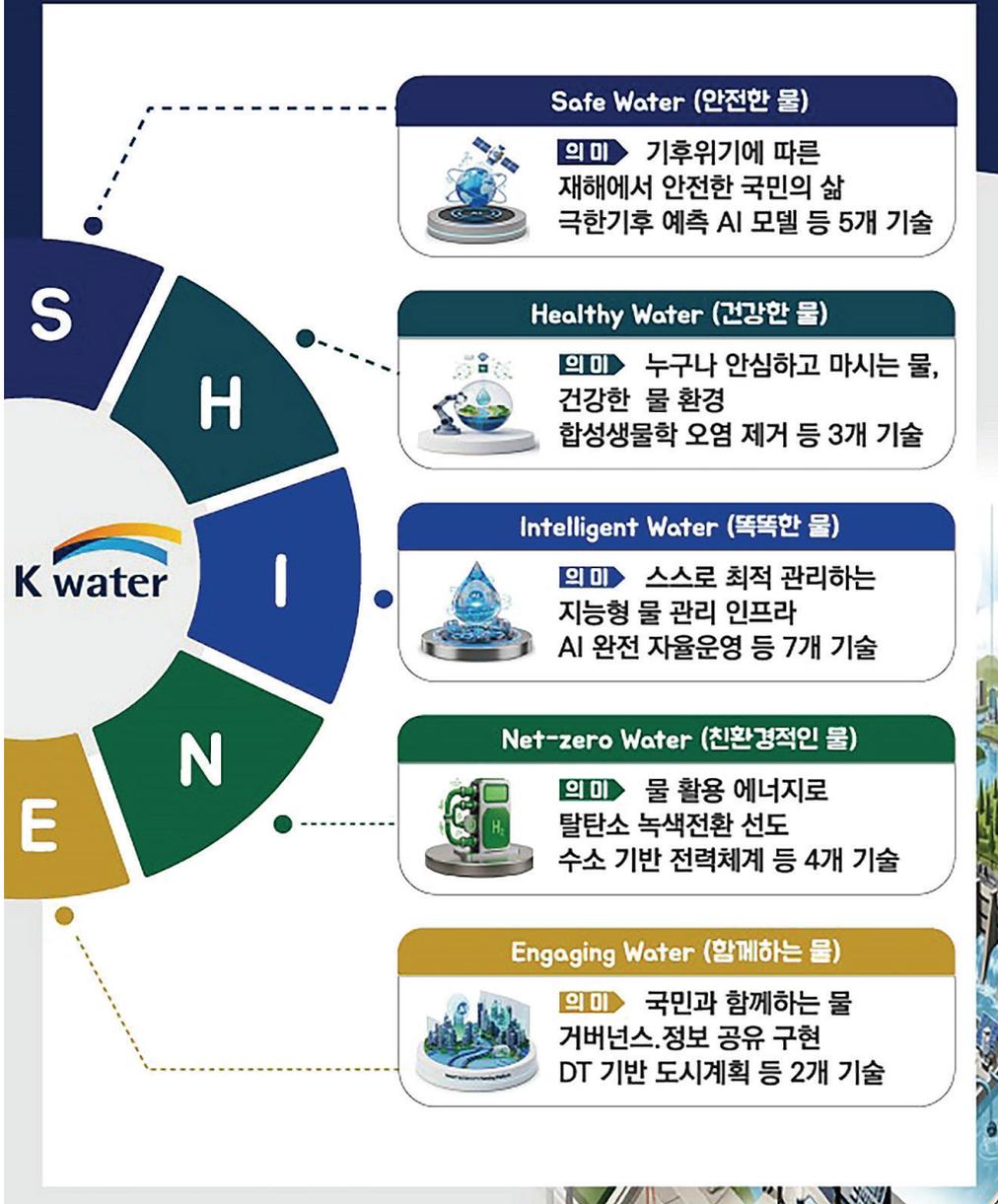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K-water가 전망하는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20대 미래 물 기술 2035



20대 물 기술 주요 내용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20대 미래 물 기술 주요 내용

SAFE

- 1 차세대 도시침수 자율 관제시스템 (조연결 N/W-AI 융합)
- 2 극한 호우 홍수 예측 특화 AI 기반 기상 모델
- 3 글로벌 수자원/수재해 분석 가시화 기술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 4 초소형 위성-AI 온보드 홍수피해 준 실시간 모니터링

- 11 로봇-AI 기반 물환경 디지털 트윈 기술
- 12 센서-로봇-AI 융합형 스마트 상수도 관망 진단
- 13 자율 지능형 AI 수자원 군집위성
- 14 물순환 연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INTELLIGENT

HEALTHY

- 5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지구 수자원 위성 시스템
- 6 초지능 기반 상수도 쏠 과정 자율 운영 기술
- 7 합성생물학 기반 차세대 환경 오염물질 관리 기술
- 8 에이전트형 멀티로봇 기반 물 인프라 쏠 주기 안전관리

- 15 미래에너지 수소 기반 비상전력 플랫폼
- 16 지속가능 전력 안정형 가변속 양수발전 시스템
- 17 박막형 태양광 모듈 활용 수상 태양광 기술
- 18 태양광-열 융합 활용 자립형 에너지 공급 기술

NET ZERO

INTELLIGENT

- 9 AI 완전 자율 운영 플랫폼
- 10 상수도 관망 시공간적 디지털 동기화 (관망 가상화)

- 19 AI-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계획 플랫폼
- 20 지능형 BIM-XR 기반 물 인프라 쏠 주기 디지털 관리

ENGAGING

# '공정한 대우'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

공무원의 직군 개편부터 민간 자격의 제도적 인정까지,  
방재안전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증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완성하는 길이다.  
공정이 곧 안전이다.

”



김진호

한국방재협회 부회장  
미디어펜 부사장 겸 주필

## 1. 벼랑 끝 방재안전 생태계, 대수술 해야

정치, 경제, 사회의 거대 담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삼킨 연말이다. 하지만 그 어떤 담론 중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관심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 즉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국정감사 자료는 대한민국 방재안전 생태계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반향 없이 사라지고 각종 개선 방안과 법안은 창고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핵심은 재난 전문가는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력조차 불합리한 처우와 불공정한 제도 탓에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억강부약(抑強扶弱)'과 '공정'을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왔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는 비단 경제나 사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에도 이러한 '공정의 잣대'가 시급히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어느 분야보다 시급하다.

## 2.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스매칭’, 공직사회의 불공정

현재 지자체 재난 관리 부서의 현실은 ‘불공정’ 그 자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무 부서 인력의 대다수가 비전문 인력으로 채워진 ‘미스매칭(Mismatching)’ 현상은 여전하다. 각 시·군·구 재난 부서 20여 명 중 방재안전직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포병부대에 포병 없이 보병만 배치해놓고 승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부대원의 90%가 대포를 다룰 줄 모르는 일반 보병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보병들은 익숙지 않은 거대 장비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공포에 떨 것이고, 고작 한두 명뿐인 포병 주특기 병사가 조종부터 사격까지 혼자 감당하다 탈진해 쓰러질 것이다. 전선은 뚫리고 패전의 고통은 후방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 섬뜩한 가정이 불행히도 현재 대한민국 재난안전 관리 부서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은 과중한 책임의 공포에 시달린다. 또 극소수의 방재안전직은 고립된 채 ‘독박 업무’를 떠안는다. 가장 험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수행함에도, 돌아오는 것은 ‘소수 기술직렬’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승진 제한과 소외뿐이다.

권한은 주지 않고 무한 책임만 지우는 시스템, 합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사명감만 강요하는 조직은 이 정부가 타파하고자 하는 적폐다. 따라서 방재안전직렬을 현재의 기술직군에서 ‘행정직군(재난행정직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대의 재난 관리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고 부서를 총괄하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휘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업무의 본질을 꿰뚫는 ‘비정상적 정상화’

다. 또한, 자연 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활용해 비전문 인력을 방재안전직으로 단계적 교체하자는 제안은 예산 증액 없이, 또 조직 내 갈등 없이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이재명 정부 특유의 ‘실사구시(實事求是)’ 해법이라 할 만하다.

## 3. 민간 전문가를 가로막는 칸막이 행정, 또 다른 불공정

공정의 문제는 공직 사회 내부에만 있지 않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재난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민간 전문가 영역인 ‘방재기사’들이 겪는 불합리 또한 심각하다.

정부는 2019년 재난 분야 최초의 국가기술자격으로 ‘방재기사’를 신설해 1,1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격을 취득하고도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국토부의 건설기술인, 산업부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동부의 안전관리자 그 어디에도 온전히 포함되지 못한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규범상 ‘방재(防災)’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광의(廣義)의 개념임에도, 현행 엔지니어링 분류는 화재 중심의 ‘소방(消防)’에 묶여 있어 방재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또한, 실제 업무는 토목·건설과 밀접함에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양성한 국가 공인 전문가들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에 독자적인 ‘방재’ 분야를 신설하고, 방재기사를 건설기술인 및 중대재해 안전관리자로 인정하는 것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특혜가 아니다. 기후 재난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문성을 총동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 4. 시스템의 완성이 곧 국민 안전의 완성

최종적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와 참여 기술인에 대한 실적·경력 관리의 법제화 역시 시급하다. 건설, 환경 등 타 분야는 이미 법적으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분야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부실한 재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멍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를 처벌하고 꼬리 자르는 방식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일 뿐이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꿔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 사회'를 주창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중 '안전하게 살 권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전선에 있는 방재안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군 개편부터 민간 자격의 제도적 인정까지, 방재안전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증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완성하는 길이다. 공정이 곧 안전이다.

KDPA



#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소개



전계원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

기후위기의 가속과 도시 인구의 집중,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재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태풍, 산사태,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화재, 사회적 재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필요 속에서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재난안전 분야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 재난관리분야의 실천적 이론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현장맞춤형 재난관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내 최초로 재난분야 석·박사과정이 개설된 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BK21 환경재난 교육연구단 공동 워크숍 기념 단체사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은 재난안전관리, 도시환경재난관리, 스마트안전시스템 등 3개 전공을 운영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재난관리론, 도시방재학, 위기·안전관리론, 방재 관련 법규와 같은 핵심 과목을 토대로 한 기초 역량뿐 아니라, AI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센서공학, 기상·기후데이터 분석 등 첨단 선택 교과목을 개설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 이론을 학습하는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역량을 기르게 된다.

특히 이 대학원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 특강과 국제·국내 세미나, 정기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농어촌연구원 수리시험연구센터 등 주요 기관 현장견학을 통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멘토링, 인턴십, Pathfinder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현장견학(울진)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 현장견학

## 교육 시설



※ 대학원 강의실



※ 비대면 온라인 화상강의실



※ 토석류 실험실

강의실 5개  
실험실·실습실 8개  
교수연구실·행정실 등  
총 26개의 교육 시설 보유

## 기자재



※ Drone 측정 Set



※ 대학원 유속계



※ RiverSurveyor

재난분석 및 공간분석 S/W  
지상 LiDAR Set  
Drone 측정 Set  
토석류 실험장치  
인공강우측정 실험장치 등  
실습을 위한 최신 기자재 보유



**교육생들을 위한 강의 및 연구가 가능한  
공간 및 장비 확보**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은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재  
난분야 석·박사를 배출했으며, 전일제 인력과 재난관리 현  
업 종사자를 함께 포용하는 모집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연구의 기반 역시 튼튼하다. 2,390㎡ 규모의 교육  
공간에는 재난안전관리연구실, 시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  
실, 스마트안전시스템연구실 등 특화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석류 실험실과 강우-유출 실험실에는 최신 측  
정 장비와 실험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실험을 자유롭게 수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 협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토대학  
방재연구소를 비롯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  
해 공동연구와 교육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방재  
네트워크(GADRI) 참여와 한·일 방재세미나 등 국제적 교  
류 채널을 통해 글로벌 표준과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네트  
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학생들에  
게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글로벌 시각을 갖  
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약하며 국가와 지역의 안전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로 성  
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론과 실무, 교육과 연구, 국내와 국  
제를 아우르는 대학원의 특화된 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앞으로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은 데이터 중심의  
교육체계 고도화, 현장 수요와 정책 연계 강화, 국제 공동  
연구 확대를 통해 '재난에 준비된 사회'를 이끄는 리더 양  
성에 매진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과 참여가 더해질 때,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은 미래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더욱 든든한 인재 양성의 터전이 될  
것이다. **KDPA**

# 하모니카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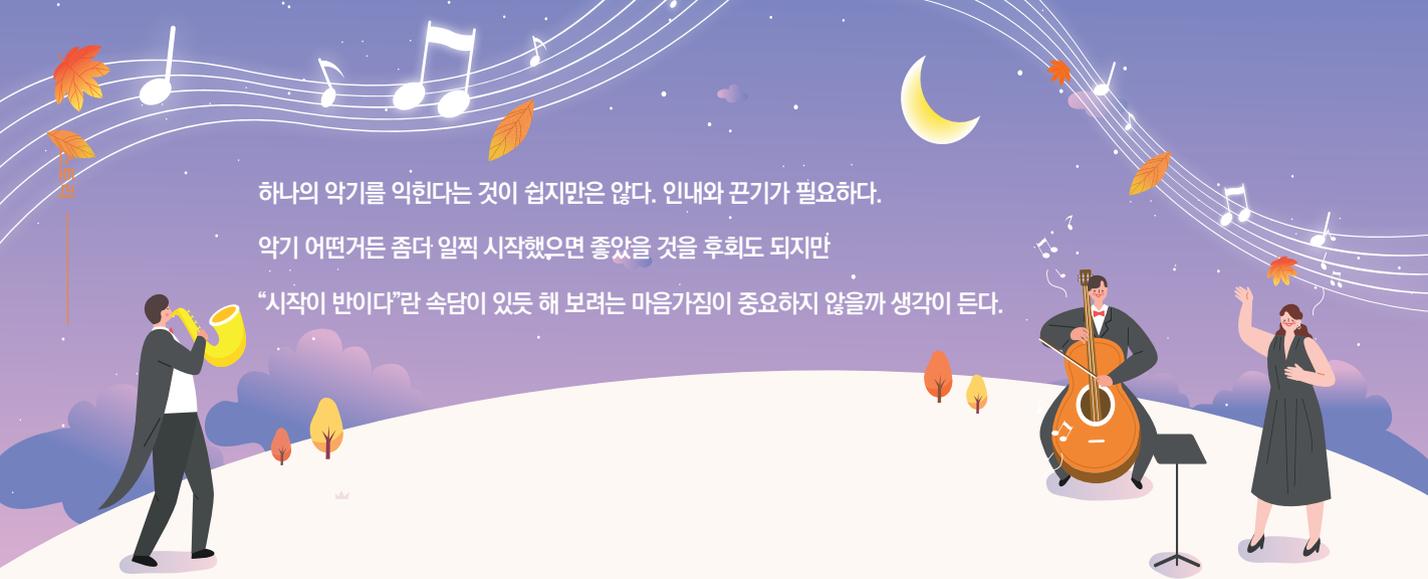
**윤순섭**  
한국수필가협회 작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 할 수 있어야 한단다. 신체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여러가지 많다. 그중에 음악이 주는 장점은 마음을 어루 만져주는 감정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다니던 소아과 의사 선생님 말씀이 특히 아들은 악기를 다룰줄 알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사춘기도 쉽게 지나가게 된다고 조언하셨다. 그래서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될때까지 피아노를 배웠는데 한번씩 연주해 줄때면 아름다운 선율에 귀호강을 하며 흐뭇해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피아노 치는걸 보지못해 아쉬움이 컸다.

피아노는 이사할때 마다 방 하나를 차지하다 지금은 손자가 물려 받았다. 이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인심쓰듯 들려주는 연주에 감지덕지 하기도 한다. 젊어서 잠깐이나마 피아노도 배워보고 남편과 함께 기타강습에 등록하여 다녀도 봤지만 진득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그때는 그림 그리기에 한창 빠져 있던터라 기타 배우기는 뒷전이였다. 그러다 단체로 하모니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레슨 첫주에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어 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그 시간을 허비한것 같아 아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중 합동으로 하모니카를 연주해야할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전문적인 강사에게 배우고 있지만 난 시간상 같이 할수가 없어 혼자 유튜브를 보며 독학 하기로 했다.

하모니카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불어 봄직하고, 다른 악기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튜브에 나온대로 따라하니 쉬운 노래는 금새 할수 있지만 난위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아직 첫걸음을 막 내던



하나의 악기를 익힌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악기 어떤거든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도 되지만

“시작이 반이다”란 속담이 있듯 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는 실력으로 무대 위에 서려니 긴장이 되었다. 우크렐레와 기타가 함께 연주 해서인지 악간의 실수도 묻히지며 그런대로 하모니카 합주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기며 하모니카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된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유명한 하모니카 연주자의 공연을 본적이 있다. 하모니카가 그렇게 풍성하고 화려한 소리를 낼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다양한 음색에서 나오는 경쾌함은 하모니카가 주는 매력중 하나다. 더군다나 결코 배우기가 쉬운 악기가 아니라 생각이 갈수록 든다.

가까운 지인중에 노후취미로 색소폰을 연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동호인들이 연말이면 연주회를 연다. 매년 참석할때마다 깨닫는 것은 즐거운 표정에서 너무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알수있다. 거의 은퇴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해가 갈수록 실력들이 늘어서 감탄이 절로 나온다. 연말 연주를 위해 1년을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 서는데 그 열정에 부러움 마저 든다. 가족들과 관객 앞에서 연주복을 차려입고 즐겁게 연주 하시는 모습은 마치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 처럼 보인다.

하나의 악기를 익힌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악기 어떤거든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도 되지만 “시작이 반이다”란 속담이 있듯 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동안은

에어로폰의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배울곳을 알아 보았지만 가까운 곳을 찾다가 세월만 보냈다. 이래저래 고민하다 하모니카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휴대하기 간편하고 그나마 배우기가 쉬울것 같은 알팍한 속셈에서였다. 아직은 동요 정도 밖에 못 불지만 좋아하는 가요를 멋들어지게 불려면 문화센터 라도 알아봐야 할것 같다. 연습 한답시고 뽀뽀 거리는 하모니카 소리도 즐겁게 들어주는 남편의 응원에 의욕이 생기니 이번에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를 나름 결심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활력있게 살려면 젊을때 부터 준비해야겠다. 수많은 취미들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없고 꾸준함을 요하는 악기 배우기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것 같다. 평균 수명이 늘어 길어진 노후 여가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이 필수불가결 하기에 이번 하모니카 배우기에 단단히 작심해야겠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악기 배우기 인데 이 목표가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다짐해 본다. **KDPA**



### 재난안전기술 평가 제도 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 1. 5)시 사회재난 기술 포함하여 재난 전체(자연재난+사회재난)로 재난안전신기술 확대 심사 실시

### 추진경과

- + '05.1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제도 도입
- + '06.6월 :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
- + '12.7월 : 조달청 PQ 심사 시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 '12.8월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
- + '13.11월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 + '14.1월 : 방재신기술 ‘NET’ 마크통합
- + '06~22년 :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 '23.1월 : 방재신기술 → “재난안전신기술”로 명칭 변경 ※ 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 '23.1월 : 재난안전기술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

#### “재난안전기술”이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재난안전기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제3호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호 :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심사절차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 유효기간 연장심사



## 심사기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 신규·진보성 및 재난안전 분야 기술 해당 여부,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 등 결정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신규·진보성 (70)	신규성(4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우수성(30)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 2차 심사 : 기술의 우수성 및 신규·진보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기준
우수성 (80)	기술의 성능 (30)	재난안전기술의 성능·효과의 우수성
		재난안전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현장적용성 (30)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시장성(20)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신규·진보성 (20)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독창성이 인정 되는 기술(신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진보성)

## 심사기준 (유효기간 연장)

평가항목		평가기준
활용실적(30)		활용건수 및 활용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10)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재난안전효과(20)	지정 후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방재 효과의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배점
	경제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 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안전성(10)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유지관리 편의성(10)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편의성 정도에 따라 배점
	기술 개량·개선 노력(10)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가점(10)		해외활용실적 및 기술보급 노력 등에 따라 부여

## 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

### ○ 'NET'신기술 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기술의 명칭과 유효(보호)기간을 표기하여 사용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 지정 5년, 유효기간 연장 최대 7년



### ○ 신기술 유효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 및 검증 시 보호기간 5년, 보호기간 연장 시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 신기술 제품 구매 및 활용 공사를 발주한 담당자는 신기술로 활용으로 인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

+ 신기술로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동종분야의 신기술간 제한경쟁입찰 가능

### ○ PQ 점수 부여

+ 조달청 및 공공기관 PQ심사 시 방재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해 점수 부여  
※ [기획재정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 신기술 우선 활용

+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하여 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 ○ 기타 지원혜택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신기술 단가 반영

#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꺾기부 패널식 옹벽



지정번호	재난안전 신기술 제2023-3호		
기술명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꺾기부 패널식 옹벽		
기술개발자	주식회사 구마에스앤씨(S&C)	주 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천북산단로284
보호기간	2023.01.10. ~ 2028.01.09. (5년)		
홈페이지	www.gooma.co.kr		

## 1. 신기술의 내용

###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 (1) 범위

- 비탈면에 네일 또는 영구앵커 등의 보강재 및 프리캐스트 패널의 상호 결합을 위해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일체형 옹벽을 축조하는 꺾기부 패널식 옹벽 및 시공방법

#### (2) 내용

- 비탈면의 보강을 위해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 한 후 지반보강재인 Nail(락볼트) 또는 영구앵커로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비탈면을 천공한 후 Nail(락볼트) 또는 영구앵커 등 지반보강공을 시공한 후 전면에 공장에서 제작된 PC 패널을 설치하고 좌,우는 반폭으로 겹치게 시공되어 PC패널 좌,우에 매립되어 있는 너트(인서트)에 겹쳐지는 PC 패널의 뒷면에서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 결합시키면 옹벽전체의 좌,우가 일체형이되어 보강재(네일 또는 영구앵커)와 결속되어 일체화된 거동을 하고 비탈면에서 발생하는 하중, 토압 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국부적인 변위와 부등침하로 인한 PC패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우기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압, 하중, 외부적 요인으로 보강재와 PC패널의 탈락을 방지하고 보강공에 작용하는 힘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비탈면 보강하는 기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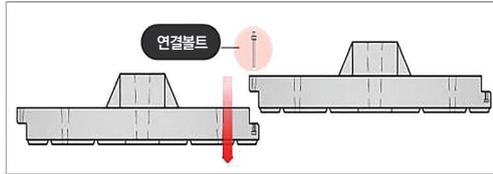
### 나. 신기술의 특징

기술 명칭	<b>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깎기부 패널식 옹벽</b>
적용 원리	급경사지, 인공 비탈면 등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지반 풍화작용, 외력에 의한 하중증가, 국지성 호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재해 발생을 억제 시키고 보강하여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자연석 문양의 우수한 디자인을 적용, 주변과 조화

② PC패널의 좌, 우가 반복으로 겹쳐 후면에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

#### ANCHOR TYPE GMP-PANEL



#### NAIL TYPE GMP-PANEL



- ◆ **시 공 성** - 패널은 공장제작품으로 완제품을 현장에서 바로 시공 가능하므로 현장타설 보다 공기단축에 우수하고 시공이 빠르다

TOP-DOWN 및 BOTTOM-UP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시공시간을 단축
- ◆ **경 제 성** - 전면에 두부를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캡을 설치하여 앵커의 두부를 외부로 부터 차단시켜 부식 및 긴장력 손실이 적게 발생되도록 억제. 타 공법에 비하여 약 27.07%(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자료근거)원가가 절감
- ◆ **안 전 성** - 볼트를 이용하여 상호 체결함으로써 일반적인 패널보다 변형이 매우 작고, 국부적인 배부를 현상, 시공중이나 시공후 발생하는 패널의 변형을 억제 함으로써 보강시 더욱 안정성이 우수
- ◆ **유지관리성** - 패널의 일체화로 처음부터 패널의 뒤뜸림 현상을 현저히 축소시켜 패널의 뒤뜸림 현상이 거의 없으므로 인장력이 감소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형태유지가 가능하므로 유지관리면에서 우수

## 다. 신기술의 시공순서(작동방식)

01 원지반 비탈면 절취 및 정리



02 배면보강 및 연결공 천공



03 보강재 삽입 및 그라우팅



04 기초 콘크리트 타설



05 GMP PANEL 설치



06 연결볼트 설치



07 뒷채움 콘크리트 타설



08 인장



09 뒷채움 토사채움



10 반복작업 및 마감



## 2.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전망

### 가. 활용실적

발주처	공사명	소재지	계약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영천(용산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깎기부 패널식 옹벽공사	경북 영천시	2020.05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팔수골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공사 중 깎기부 패널식 옹벽공사	경북 영양군	2021.04
천북기업도시(주)	천북일반산업단지 내 산지복구 토목공사	경북 경주시	2021.05
에스포항병원	이동산103-5번지외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사면보호패널설치공사	경북 포항시	2021.09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도화동 도로확포장공사 중 깎기부 패널식옹벽공사	경북 문경시	2021.11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방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경북 청도군	2022.04
경상북도 울릉군청	울릉도 도동2리 까끼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경북 울릉군	2022.07

### 나. 향후 활용전망

#### (1) 신청기술 관련 시장 동향

- 우리나라의 산악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필연적으로 시공되는 옹벽분야이며 기존에 형성된 급경사지, 비탈면 등 과거에 주로 적용되었던 콘크리트 현장타설 방식의 중력식옹벽 및 캔탈레버식 옹벽은 옹벽높이의 제한, 기초처리의 과다한 비용 발생, 콘크리트 현장타설로 인한 복잡한 시공공정과 공사기간 증대, 균일한 품질 확보의 어려움, 옹벽의 과도한 부재 단면과 이에 따른 재료사용 증가 등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보강재가 없이 시공된 옹벽은 지진, 폭우, 비탈면의 풍화작용으로 인한 토압 증대 등으로 붕괴우려가 있고 전면의 콘크리트면의 디자인 또한 한정적이어서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옹벽의 단점을 극복하고 비탈면에 대한 안정성검토로 붕괴를 사전에 억제하고 미관이 우수한 프리캐스트 패널식옹벽이 적용되고 있다. 프리캐스트 패널식 옹벽은 미리 제작된 철근콘크리트 패널을 절취된 비탈면에 설치하고 별도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전단강도를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프리캐스트 패널과 보강재의 사용으로 기존 옹벽의 시공성 및 품질 문제, 단면의 증가, 안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신청기술은 국내의 수 많은 건설공사 중 비탈면 보강, 급경사지 보강 등 비탈면을 깎기하는 여러 건설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경관성, 독창성 등 타 기술대비 매우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 (2) 신청기술 관련 경쟁 우위 여부, 시장 확대 가능성

- 깎기부 패널식옹벽은 토공량 발생 및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용지제한에 따른 토지의 최적이용과 기 형성된 깎기비탈면의 보강, 급경사지 등에서 그 적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에 따라 보강재의 종류나 패널의 규격 및 디자인이 다양하게 개발 되어 깎기부 패널식 옹벽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깎기부 옹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MP-WALL을 개발 하였고 시장성은 공법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른 것으로 다변화되는 현장의 재해요소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의 형식으로 구조, 성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할 때 조합되는 공법들에 대하여 보조적인 측면의 공법이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법선정이나 비교 시에 시장성 요구에 따라 검토성이 많은 공법으로서 안전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면 등에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3) 공익성

- 신청기술의 PC패널은 자체공장에서 제작되므로 규격화된 몰드의 반복사용으로 소모성자재를 최소화하여 사용가능
- 신청기술을 개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반보강재에대한 공법은 많이 개발되어있다. 보강재인 앵커나 네일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두부공으로 두부의 썩기체가 인장할 때 노출되면서 부식이 일어남. 이때 두부공이 탈락되면서 보강재의 인장력이 저하되며 여러문제가 발생함. 신청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패널을 볼트로 체결하고 두부를 패널 속으로 매립시켜 외부와 차단되도록 콘크리트판으로 된 캡을 덮는방법 등을 고안함.

지반보강재에만 기술개발이 집중되어있는 편향적 개발시장에 신청기술을 필두로 향상된 기술개발로 국가,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

## 3. 기술 문의처

회사명	소속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주식회사 구마에스앤씨(S&C)	관리부	손이현 대리	gooma32@hanmail.net	054-745-4377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5년 최종) ❖

### ◉ 재해별 신기술 지정현황 (총 지정건수)

구분	총 계 (335건)								
	자연재난	소계	내수	하천	사면지반	지진	해안	대설	낙뢰
	310	105	92	48	42	6	6	9	2
사회재난	소계	안전관리	교통사고	화재	붕괴	미세먼지	안전사고	-	-
	25	9	3	6	3	1	3		

### ◉ 25년도 신규 지정현황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1	제2025-1-1호	(주)은성엔지니어링	스마트 폰 및 위치 경보 기능 기반 배전반의 통전 위험 알림 기술	'30.1.6	기타
2	제2025-2호	(주)하신건설 (주)바우테크	3D Textile(입체섬유)을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수로 구조물의 보수 공법	'30.1.13	내수재해
3	제2025-3호	신신이엔지(주) 태성엔텍(주) 엔에스하이드로(주)	탈부착이 용이한 수중펌프가 적용된 펌프수문 및 일체형펌프	'30.2.9	내수재해
4	제2025-4호	삼진공업(주)	이송압력 유지부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	'30.2.16	내수재해
5	제2025-5호	(주)트라움목조주택	L-tie를 사용한 경골전단벽 수평하중저항 및 내진성능 향상 기술	'30.2.27	지진재해
6	제2025-6호	현대제철(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해전산업(주)	다단식 횡방향 슬라이딩 차수문을 이용한 침수방지 기술	'30.3.5	내수재해
7	제2025-7호	(주)서영산업	행거장치와 사이드레일이 결합된 케이블 트레이 진동 저감용 지진재해 예방기술	'30.3.17	지진재해
8	제2025-8호	제이케이 엔지니어링(주)	태양광발전장치에 적용한 모듈 이탈방지 및 이상위치검출 기술	'30.3.17	안전관리
9	제2025-9호	(주)아이엔텍	협잡물 끼임 제거능력 향상을 위한 후면 레이크 및 공압 노즐을 장착한 로터리 제진기	'30.3.20	내수재해
10	제2025-10호	(주)비전테크	침수환경에서 누설전류 포집에 의한 저압 전기설비 운전의 연속성 확보 기술	'30.3.25	낙뢰재해
11	제2025-11호	케이에스티이엔씨(주)	WB접합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	'30.3.27	지진재해
12	제2025-12호	제이엠아이(주)	수중모터펌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와류 저감장치 및 점검의 용이성을 위한 케이블 경량커버를 적용한 기술	'30.4.6	내수재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5년 최종) ❖❖❖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13	제2025-13호	(주)동산산업건설	표면 조도계수 저감을 통한 하수관거 보수보강공법	'30.4.21	내수재해
14	제2025-14호	(주)오성기공	롤러를 활용한 레이크 지지와 센서에 의한 정위치 정지장치를 적용한 제진기	'30.4.21	내수재해
15	제2025-15호	(주)대우건설 (주)정호	선형 강재 급속 체결을 통한 철근콘크리트 기둥 내진보강공법	'30.5.6	지진재해
16	제2025-16호	(주)미래로택	멀티포인트 레이더 유속계를 활용한 실시간 자동 하천 유속 측정 기술	'30.5.11	하천재해
17	제2025-17호	지엘이앤씨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설치·해체 작업자 보호 예방기술	'30.5.19	안전관리
18	제2025-18호	강산기술단(주), 인프라혁신(주), (주)한울씨엔비, (주)제이씨씨건설	디지털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중보강구조물의 정밀시공을 유도하는 측정 및 시공 기술	'30.6.8	안전관리
19	제2025-19호 (25.6.23)	아이비이앤씨(주), 코오롱글로벌(주), 디엘건설(주), 에이치엘 디앤아이한라(주)	강판 매입형 PHC파일을 활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기술	'30.6.22	사면지반 재해
20	제2025-20호 (25.7.8)	범호정공	내진서포트행거와 내진연결조인트를 케이블트레이에 적용시킨 지진 재해 예방 기술	'30.7.7	지진재해
21	제2025-21호 (25.7.11)	(주)아이콘텍이앤씨, (주)동성엔지니어링, (주)동평건설엔지니어링	굴절 커플러를 이용한 깎기비탈면 판넬식 옹벽 공법	'30.7.10	사면지반 재해
22	제2025-22호 (25.8.6)	스마트이앤씨(주), (주)온누리로	인장형 탄성 네트워크 장력센서 기반 스마트 토석류 방호 재난 경보 기술	'30.8.5	사면지반 재해
23	제2025-23호 (25.9.15)	다스코(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유원건설턴드(주)	공압원리를 활용하여 신속한 개폐가 가능한 배연구를 갖춘 방음터널 재난안전 기술 및 시설	'30.9.14	화재
24	제2025-24호 (25.10.24)	(주)새움	IoT기반 능동형 다목적 스마트 쉘터 구성을 통한 미세먼지 및 냉난방 원격감시제어 기술	'30.10.23	미세먼지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2025년 최종) ❖❖❖

구분	지정번호	지정업체	신기술명	보호기간	비고
25	제2025-25호 (25.11.3)	엔에스하이드로(주)	가이드베인 보호캡이 적용된 수중 축·사류 펌프	'30.11.2	내수재해
26	제2025-26호 (25.11.13)	해전산업(주)	슬라이딩 락킹 시스템을 적용한 축소 격납형 기립식 차수벽 기술	'30.11.12	해안재해
27	제2025-27호 (25.11.24)	안덕테크(주), 유윤건설(주), (주)평장씨지알	절삭면을 계단형으로 절삭이 가능한 일체형 절삭장비와 접이식 가변지지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맨홀 보수기술	'30.11.23	기타 (안전사고)
28	제2025-28호 (25.12.5)	보일씨앤씨(주), (주)봉희건설	반전속도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보강 튜브 이송장치와 분리된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30.12.4	내수재해
29	제2025-29호 (25.12.24)	(주)한국수안	모듈식 부품의 조립결합방식을 적용한 내부 이동 통로가 있는 박스형 플라스틱 소규모 저류조 공법	'30.12.23	내수재해

※ 재난안전신기술의 자세한 기술 내용은 QR코드 접속하여 확인바랍니다.



##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등록 안내



### 1.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제도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 2. 평가위원 자격요건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 +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 +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 3. 평가위원 수행업무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사
-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연장 취소 심사

## 4. 문의 및 제출처

- +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 + 평가심사위원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 담당 : 연구기술실 김진호 팀장
- + TEL : 02-6952-9388                      + FAX : 02-3472-8064
- + E-mail : kjh85@kodipa.or.kr

## 5. 제출 서류

- 증명서류(각 1부, 사본 제출(PDF 제출) 가능)
  1.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2.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3. 최종 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필요 연수 증명 위함)
  5. 그 밖에 전문가 등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분야 자격증”이란 신기술 전문분야 분류표(붙임3)와 관련된 자격증
- 재난안전신기술 심사위원 자격별 필수 제출 서류
  - ▶ 아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증명서류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2,4)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 4)
    4.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류 3,4)
    5. 재난안전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증명서류 4)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기관장이 인정한 자 (증명서류 3,4,5)

# 한국방재협회 회원가입안내

## ○ 한국방재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 협회 정관 제6조)

- 개인(평생)회원 : 방재관련분야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종사자 등
- 단체회원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방재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의 용역 및 시공업체, 방재용자재의 생산업체 등
-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관련 단체 등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방재·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위원 추천
- 풍수해 등 재해발생 조사와 관련학술 연구용역업무 참여 및 지원
-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및 지원
-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및 협회 자문위원회 참여
- 정기간행물 “방재저널” 우송 및 세미나·워크숍 무료초청
-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재난안전종사자, 기업재난관리사) 수강료 할인
- 홈페이지 내 방재·재난 최신 정보 및 자료 공유 게시판 제공

## ○ 회원가입 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odipa.or.kr) 「회원가입」 탭에서 원하시는 회원(개인, 단체, 특별)을 클릭하여 작성 후 “가입”을 눌러주시고, 아래 계좌 또는 지로용지(요구시 송부)로 회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보내실곳 : (우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T. 02-3472-8063, F. 02-3472-8064, E-mail : master@kodipa.or.kr)
- 회비입금계좌 : 기업은행 062-061676-04-016 (예금주 : 한국방재협회)

## ○ 회비 안내

회원	구분		년회비
개인회원	개인회원(매년 연회비 납부)		30,000원
	평생회원(연회비 없음)		300,000원
단체회원	특급(상근인력 1,000명 이상)		2,000,000원
	1급(상근인력 100명 이상~1,000명 미만)		1,000,000원
	2급(상근인력 100명 미만)		500,000원
특별회원	광역자치단체(시·도)		3,000,000원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2,000,000원
		인구 50만 미만	1,000,000원
	재난관리책임기관		2,000,000원
기타단체(지방공기업 등)		1,000,000원	

# 한국방재협회 회원동정 및 신규회원

## ○ 신규 회원가입 : 개인회원 77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1	평생	이동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소장	20251103
2	평생	이병철	현진종합엔지니어링	부사장	20251103
3	평생	유찬호	대림대학교	교수	20251103
4	평생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20251103
5	평생	박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1103
6	평생	박석준	(사)대한토목시공기술사회	회장	20251105
7	개인	오민환	(주)JM엔지니어링	상무	20251105
8	개인	위영수	(주)동국기술단	상무	20251106
9	개인	박지영	주식회사 청림이엔지	과장	20251107
10	개인	정민교	중원엔지니어링(주)	부장	20251109
11	개인	정상준	주식회사 인우	실장	20251111
12	평생	김응석	선문대학교	정교수	20251113
13	평생	정진영	아람코퍼레이션주식회사	총괄이사	20251114
14	평생	송한기	(주)명진이엔씨	대표	20251118
15	평생	조동진	(주)삼안	부장	20251119
16	평생	박상순	신명건설기술공사	부사장	20251119
17	평생	김종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120
18	평생	조병철			20251121
19	평생	강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주무관	20251121
20	평생	조성훈	제일산림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대표	20251121
21	평생	서용권	동부엔지니어링(주)	부사장	20251124
22	평생	박완순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위원	20251124
23	평생	김택근			20251125
24	평생	김재명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125
25	평생	강원대	한국농어촌공사		20251128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26	개인	김경준	세현지오택기술사사무소	대표	20251201
27	개인	이성호	성신양회(주)	수석	20251203
28	개인	진한규	주식회사 인우	이사	20251204
29	평생	박재현	(주)정도엔지니어링	이사	20251205
30	평생	백정현	(주)신명건설기술공사	상무	20251208
31	개인	유성진	(주)건일	사장	20251208
32	평생	오진수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09
33	평생	김창신	행정안전부	소장	20251209
34	평생	권혁재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11
35	개인	김규동	고령군청	건설과장	20251211
36	평생	이병운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12
37	평생	이춘호	동부엔지니어링(주)	전무	20251212
38	개인	허승영	해군1함대사령부	대위	20251215
39	평생	김재권	한국종합기술	상무보	20251215
40	평생	이광수	베스텍엔지니어링	상무	20251215
41	평생	이병복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15
42	개인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20251215
43	개인	한상수	(주)서영엔지니어링	상무	20251216
44	평생	이원우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16
45	평생	전용화	(주)티엔씨엔지니어링	전무	20251217
46	개인	전용태	새론이앤씨	부사장	20251218
47	평생	조성일	동부엔지니어링(주)	상무	20251218
48	개인	김영찬	세광기술사사무소	대표	20251218
49	평생	박영철	(주)내경엔지니어링	전무	20251218
50	평생	장민철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20251219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51	평생	현성원	동부엔지니어링(주)	전무	20251219
52	평생	우민석	푸른서부환경(주)	본부장	20251219
53	개인	임청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위원	20251219
54	개인	김용주	한국환경공단	책임위원	20251219
55	개인	허대양	하나이엔씨	지사장	20251222
56	평생	홍관영	(주)삼안	이사	20251222
57	평생	김선욱	(주) HR E&S	이사	20251222
58	개인	김강모	(주)도화엔지니어링	이사	20251222
59	개인	허영희	(주)삼안	전무이사	20251222
60	평생	박정남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20251223
61	평생	박응서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20251223
62	개인	조성만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부사장	20251223
63	평생	박교	(주)삼안	이사	20251223
64	개인	정귀한	(주)삼안	전무이사	20251223
65	평생	마승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20241203
66	개인	김재환	(주)흥익기술단	전무	20251224
67	개인	홍성구	주식회사 건주이엔씨	전무	20251224
68	평생	고재석	(주)온담이엔지	부사장	20251224
69	개인	김광호	청송엔지니어링		20251224
70	평생	이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관리관	20251224
71	평생	김수철	금호건설(주)	소장	20251224
72	평생	김성경	경북도청	과장	20251226
73	평생	장승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소장	20251229
74	평생	김치현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20251229
75	평생	조성표	인천광역시청	지방부이사관	20251229



연번	구분	성명	소속(단체명)	직위	가입일
76	평생	이동현	디엘이앤씨	상무	20251230
77	평생	허응호	주식회사 창의와도시	대표이사	20251231

○ 단체회원 : 6개사

연번	단체명	대표자	가입일	비고
1	(주)다경이앤씨건축사사무소	선명숙	20251201	
2	(주)케이베츠	조총환	20251202	
3	주식회사 정도엔지니어링	정희숙, 양득천	20251205	
4	(유)이룸엔지니어링	최진영, 한상화	20251212	
5	(주)은담이엔지	임상규,이제찬	20251223	
6	(주)흥익기술단	성낙전	20251226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 교육시간

- 총 150시간
- 주간반(15일)  
09:00 ~ 18:00
- 야간반(30일)  
18:00 ~ 22:00

## 교육비

- 145만원  
(교재비 15만원 별도)
- \* 공무원, 대학생 교육비  
할인 및 교재제공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I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분야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급경사지 재해예방 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우수유출저감대책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 침수흔적도 작성

## 교육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 해당자

-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보유자  
(토질및기초, 수자원,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및교통, 농어업토목, 지질및지반, 산림, 상·하수도, 건설안전, 해안및항만, 측량및지형공간, 건축공학, 도시계획, 건설안전분야 등)
- 기술직 15년 이상, 재난관리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기술사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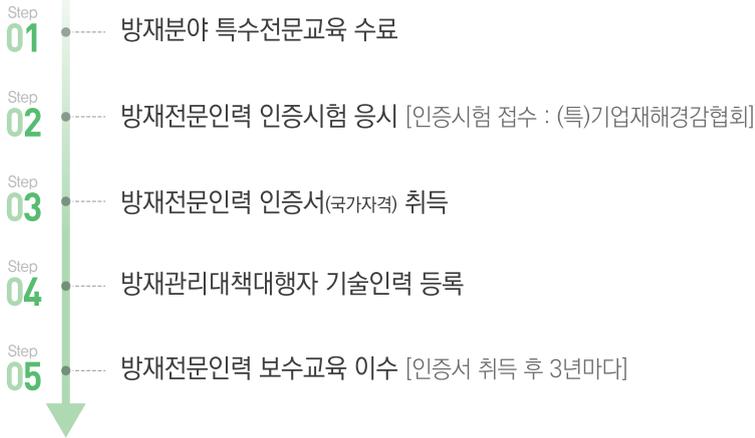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오프라인 교육</li> <li>※ 전문과정 개강일 기준 일주일 전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교육</li> <li>※ 시간이수제 신청 가능</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과 방재</li> <li>- 재난발생 및 대응 사례</li> <li>- 한국의 기상여건과 재해특성</li> <li>- 재난심리의 이해</li> <li>- 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이해 등</li> </ul> </li> <li>• 재난관리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관리체계 및 정책추진방향</li> <li>-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li> <li>- 자연재해대책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li> <li>- 재해영향평가</li> <li>- 풍수해 비상대처계획</li> <li>- 침수흔적도</li> <li>- 소규모공공시설</li> <li>- 급경사지 재해예방</li> </ul> </li> <li>•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li> <li>- 우수유출저감대책</li> <li>- 재해복구사업</li> <li>- 소하천 정비계획</li> </ul> </li> </ul>

## 수강절차



## 인증서 취득 및 활용 절차



## 기대효과

- 0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등록 가능(8분야)
- 02 중앙·지자체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위원으로 활동 가능
- 03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원 등 방재전문가로서 활동 가능
- 04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등 방재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 상시학습 인정(공무원), 기술사교육 학점 인정



**KDPA**  
Together for  
Safe Korea



#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4항(방재전문교육과정)

## 교육시간

• 2일, 총 16시간  
09:00 ~ 18:00

## 교육비

• 22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 교육대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기술인력

### 보수교육 관리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별표3의3)

#### 최초 보수교육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등록일부 6개월 이내

#### 이후 보수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 : 등록일부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서 제외

## 교육내용

방재전문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 및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

※ 3개 과정 중 어느 과정을 이수해도 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로 동일하게 인정

구분	종합과정	재해영향평가 심화과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화과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10개 분야 실무</li> <li>• 토의/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li> <li>• 재해영향평가 실무 - 작성실무, 사후관리, 사례분석</li> <li>• 토의/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관련 정책 및 법령</li> <li>•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실무 - 작성실무,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사례분석</li> <li>• 토의/평가</li> </ul>

## 수강절차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연·사회재난에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하고 피해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컨설팅,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교육

\* 법적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 교육시간

09:00 ~ 17:00

- 실무 : 5일, 35시간
- 대행 : 10일, 70시간
- 인증평가 : 5일, 35시간

## 교육비

- 실무 : 60만원
- 대행 : 120만원
- 인증평가 : 60만원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 가능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난 발생 시 기업 스스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교육대상

- 방재, 재난안전,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관련 담당 및 관리자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득 희망자

## 교육내용

구분	실무	대행	인증평가
교육목표	· 사내 재해경감활동 실무자 양성	·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 양성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위원 양성
주요내용	· 재해경감활동 프로젝트 이해 · 업무영향분석 · 위험평가 및 분석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이해 · 훈련 및 테스트 ·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 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 업무영향분석2 · 위험평가 및 분석2 · 업무연속성 전략 및 절차 실행 ·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실습	· 인증제도의 이해 · 인증심사기준 · 심사프로세스 · 심사실습

## 기대효과

실무	대행	인증평가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 ③ 기업재난관리사(실무) 자격 취득 ④ 사내 재해경감활동 업무 수행(업무담당자)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실무 자격취득 하고, 대행과정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대행) 자격 취득 ④ 대행자 등록(최소 6명 인력 확보) 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업무 수행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인증시험 응시(대행 자격취득 하고, 인증평가 이수한자) ③ 기업재난관리사(인증) 자격 취득 ④ 인증평가 대행기관 지정 (최소 5명 인력 확보) ⑤ 우수기업 인증

## 수강절차





#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받아야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교육시간

- 실무자 : 2일, 14시간
- 관리자 : 1일, 7시간
- 매뉴얼과정 : 3일, 21시간

## 교육비

- 실무자 : 22만원
  - 관리자 : 11만원
  - 매뉴얼 : 30만원
-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 국가재난관리 정책의 이해 및 재난안전관리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중단없는 공공서비스 및 행정업무 능력 향상

## 기본방향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영	위기대응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업무 기본개념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li> <li>· 안전점검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의 예방·대비능력 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매뉴얼(표준, 실무, 행동) 및 정책방향 이해</li> <li>·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사례별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반영</li> <li>·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중단없는 공공기관 기능 유지</li> </ul>

##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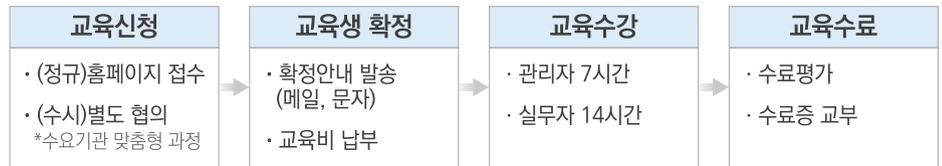
- 실무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직원
- 관리자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선택과정
	실무자과정 2일, 14시간	관리자과정 1일, 7시간	매뉴얼과정 3일, 21시간
<b>교육목표</b>	재난관리 실무능력 배양	통합 재난상황관리 향상	위기관리매뉴얼 이해 및 작성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체계의 이해</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li> <li>· 통합재난상황관리 실무</li> <li>·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li> <li>·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매뉴얼 정책 이해</li> <li>· 재난유형별 대응사례를 통한 위기관리 실무능력 배양</li> <li>· 재난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능력 향상</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 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 교육시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일, 7시간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일, 21시간

## 교육비

-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 10만원
  - 전문과정 (실무자, 관리자)  
: 30만원
- \*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교육비 할인 가능
-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 재해구호 정책의 이해 및 체계적인 재해구호 활동 능력 향상
- 재난발생 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재난 피해자 구호활동 실무 전반의 이해

## 교육대상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단체, 지역자율방재단원, 새마을운동중앙회원 등

## 교육내용

구분	기본과정 (실무자, 관리자)	선택과정 (실무자, 관리자)
	1일, 7시간	3일, 21시간
교육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 절차의 이해 및 재해구호 활동 실무능력 향상</li> <li>· 재해구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li> <li>· 재난현장 협업능력 향상</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 일반</li> <li>· 재해구호전문인력의 임무와 역할</li> <li>· 재난심리의 이해</li> <li>·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의 실무</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연재난안전”분야의 안전역량을 위한 교육

\* 법적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제13조

## 교육시간

· 1일, 4시간

## 교육비

· 5만원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 교육 가능

## 교육신청



## 교육목적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등) 이해 및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습득

## 교육대상

청소년기 또는 청년·성인기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 운영분야

- 안전분야/영역 : 자연재난안전
- 안전교육 범위 : 재난대응(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안전분야	안전영역	안전교육 범위
자연재난안전	자연재난안전	(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 구호활동
		(기후성재난) 홍수, 태풍, 미세먼지·황사,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지질성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 교육내용

구분	자연재난안전 행동요령 과정	자연재난안전 대응요령 과정
교육목표	자연재난의 이해 및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습득	자연재해 유형별 대처방안 및 재난구호활동 습득
교육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직장인, 공무원, 자원봉사단원 등
주요내용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의 이해 및 특성</li> <li>·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li> <li>· 응급처치 및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 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유형별 대처방안</li> <li>· 재해구호활동의 이해</li> <li>· 재난유형별 대피 및 재해구호활동 실습</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자율방재단 등 지자체 위탁교육

(재난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기관간 소통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 대응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시행령 제32조의 14~15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협업능력 향상 및 재난현장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 교육시간

· 별도 협의

## 교육비

· 별도 협의

※ 교육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커리큘럼, 교육시간 및 교육비 별도 협의

## 교육목적

소통을 바탕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의식 고취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업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증진

##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 교육내용

구분	재난담당공무원 워크숍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교육대상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 업무수행 능력 향상 교육</li> <li>· 재난안전관련 현장견학</li> <li>· 힐링 및 체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역할</li> <li>· 자원봉사의 이해 및 응급처치 실무</li> <li>· 재난안전체험 및 실습</li> </ul>

\* 교육 대상기관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 및 출장교육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절차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법적근거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0조

## 교육시간

· 5일, 총 40시간

## 교육비

· 60만원

## 교육목적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육성 생태계 구축

## 교육대상

재난안전산업 관련 종사자, 종사희망자 등

## 교육내용

구분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종사희망자 실무교육
교육목표	재난안전산업(기술, 제품, 장비, 시설 등)의 실무 이해를 통한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역량 향상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산업진흥법과 제도의 이해</li> <li>· 재난안전산업의 이해</li> <li>·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li> <li>· 재난안전관련 서비스 개발</li> <li>· 4차 산업과 재난안전산업의 융복합 사례</li> </ul>

## 수강절차



# 방재저널 독자 기고 안내

구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방재저널은 국내 유일의 방재관련 종합 전문지로 한국방재협회 회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방재분야 이슈에 관해 여러분의 칼럼, 정책 소개(제안), 산업과 기술, 제도 개선 등 원고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고안내

- 원고규격 : A4, HWP 파일 (양식 별첨), 4페이지 내외
- 주제 및 내용 : [자유주제] 오피니언, 회원광장(칼럼), 스토리(수필) 등
- 제출기한 : '26년 연중 제출, ※ 격월 발간 ('26년 홀수월)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master@kodipa.or.kr (김진호 팀장, 02-3472-8063)  
※ 채택되신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투고하신 글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고자는 반드시 성명, 소속,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기재 바랍니다.

## 구독자 설문조사 안내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간하는 방재저널을 구독하며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나은 방재저널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2026년 방재저널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재저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한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방재저널 설문조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신기술(NET)  
복합영상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제2024-3호



# 산불!

빨리 발견해야, 빨리 끄니다.

## 1분만 빨랐어도...

빠른 발견이 우리의 산을 살립니다.

발견이 1분 늦으면 산불 1km이상 더 확산됩니다.

## 눈으로만 보는 카메라는 떠나라!!!

감시만 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AI 복합영상 기술로 산불을 신속히 자동·무인 감지하고 통보합니다.

